

창간호

2010겨울
창간호

생협평론 2010 겨울 (창간호)

발간사		
협동조합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병호 (iCOOP협동조합연구소장)	4
축사		
인간의 본성, 그리고 생협	정태인 (경제평론가)	6
열린 생협 운동의 비전제시를 기대하며	이정주 (iCOOP생협연합회 회장)	8
길잡이		
iCOOP생협, 세상에 말 걸다	엄찬희 (편집위원장)	9

창간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12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18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26
유럽의 윤리적 소비	이의남 (iCOOP고양생협 이사)	29
창간특집 좌담		37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이슈기획

옹포금강에서 사라진 이름들	송기억 (르보작가)	44
투기자본이 판치는 세상, 공정무역은 위태롭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51

아이쿱 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57
지구촌 협동조합 소식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	김태연 (iCOOP생협개발부 무역팀장)	60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 : 경제 대안 운동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63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의 (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68
돌발논문 / 우리는 속고 있다, 속는 줄도 모르고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천안함언론검증위원)	70
서평 /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이선옥 (구로생협 문화위원, 르보작가)	76

생협평론 2010 겨울 (창간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아영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엄찬희
편집디자인	이경원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0년 12월 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전 화	02) 2060-1373/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병호 (iCOOP협동조합연구소장)

iCOOP생협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생협평론을 창간하여 구성원 서로 간에 그리고 생협과 바깥세상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N(북) E(동) W(서) S(남)의 NEWS를 실어 나르게 되고 우리가 공유할 담론을 생성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역사는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생성되었습니다. 모두 잘 사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빈부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협동조합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영국의 인클로저(enclosure)운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클로저운동으로 세상은 토지를 가진 소수의 지주와 다수 이농자가 만들어지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소수의 지주들은 본원적 축적을 하여 뒷날 산업혁명 때 공장 주인이 되었고, 이농 실업자들은 공장의 노동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역사적 과정을 겪으면서 빈자계급이 자기 자각을 통해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현대판 인클로저운동이 지구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본집약적 농업생산양식만을 허용해 자영농민을 쓸어버리고 있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유화 하고 다수 어민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또 유전물질의 특허와 생물해적의 만연 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공유물인 토지, 공기, 물의 고갈 사태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재개발 사업도 창조적 파괴의 현대판 인클로저입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세계화, 무한경쟁,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시장만 만사를 정당화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탈에 의한 축적’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묻고 있습니다. iCOOP생협 운동은 ‘밥상에서 세상을 읽으면서’ 생명운동, 환경운동, 지역운동, 여성운동,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 등 우리 사회의 바른 방향을 이끄는 신사회 운동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iCOOP생협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 민주주의의 이정표와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건강하게 구축하려는 높은 이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KBS는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특집방송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강점을 소개하는가 하면, 오마이뉴

스는 iCOOP생협 간부와 권위 있는 연구자를 대동하고 선진국 협동조합을 탐방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진보대변지인 한겨레신문은 iCOOP생협과 함께 윤리적 소비 현상논문 공모사업을 공동주최 하고 있으며, 생협 관련 특집 기사를 자주 내놓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성별경제학(gender economic), 여성친화국가(women friendly state), 보살핌의 경제론 등을 제기하여 생협의 진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iCOOP생협은 이런 내외 환경을 고려하면서 더욱 알찬 운동을 전개할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로버트 오웬(R. Owen) 이후 많은 협동조합 사상가들이 억압과 배제로부터 해방을 주장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주의를 주장해온 점을 상기합니다. 오랜 구상 끝에 창간하게 된 생협평론은 이 역사적 소명을 다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동참을 기대합니다. 

인간의 본성, 그리고 생협

정태인 (경제평론가)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면 서울 G20도 이미 끝났겠지요. 우리 정부가, 또 언론이 뭐라 해도 지난 토론토 G20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도로 결론이 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크고, 그보다 더 복잡한 경제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08년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자 모든 나라들이 일제히 돈을 풀고 정부 지출을 늘려 일단 패닉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닦친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각국은 서로에게 유리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전쟁은 다른 모든 형태의 경제 전쟁, 예컨대 이자율 전쟁이나 통상마찰로 이어질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언제나 신속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의 세계관이 또 한 번 대위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나, 방향은 확실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남을 생각하고 때로는 불공정한 처사에 목숨까지 걸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호성에 입각한 협동은, 이기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쟁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합니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협동을 규범으로 하는 자발적 모임입니다. 협동조합은 이기적 세상이 초래하는 삶과 자연의 파괴를 막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마르크스와 그람시 등 좌파 이론가들은 물론 밀이나 미드 같은 중도 개혁파와, 발라스 같은 오른쪽 학자들 모두 협동조합에서 인류의 미래를 찾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상정한 것도 오웬 등의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더 넓은 범주의 사회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반성할 줄 알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지혜가 있다면, 그래서 인류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사회 경제와 그 정신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미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이나 스페인의 몬드라곤 지역에선 협동조합이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경제나 공공경제는 경제학의 주요 연구 분야라서 꽤 많은 지식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가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또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이론적 발전이 별로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의 오랜 경험을 정리하

고 세계와 나눌 그런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생협평론』이 나온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몇몇 학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장으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열린 생협 운동의 비전 제시를 기대하며

이정주 (iCOOP생협연합회 회장)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협평론이 2008년도 첫 준비호를 낸 지 2년 만에 드디어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만큼 더 많이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협평론은 생협 활동가와 생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전문잡지입니다. 앞으로 정보지이자 실천적 교육서로, 활동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생협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환경과 이슈들을 다루어 주리가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생협 활동의 의미를 담아 활동가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iCOOP생협은 생협평론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도 활동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진행해왔습니다. 이삭코스 교육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 사안별, 대상별, 위원회별 교육부터, 입문활동가교육, 생협아카데미, 경영코스, 인문학코스 생협콜레지오,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대학원과정 개설 등 쉼 없이 교육에 열정을 쏟아 왔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이런 열정이야말로 iCOOP생협이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협평론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 지역생협들은 지역운동의 센터로서 역할을 고민하고 구상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협평론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지역운동으로서 생협의 중심 역할과 비전에 대해 모색하고, 또한 보다 다양한 계층에게 열린 생협운동의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긴 호흡으로 생협 운동을 하는 모든 분들께 사랑받고 생협 운동과 함께 더불어 발전해가는 생협평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생협평론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iCOOP생협, 세상에 말 걸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iCOOP생협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협동을 통해 먹을거리를 함께 하는 건강한 운동 사업체를 유지·확산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내외의 요구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들이 나오는 과정에 이미 iCOOP생협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왔고, 또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동조합간의 연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실천 속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 iCOOP생협이 겉치레가 아닌 내실 있는 실천을 계속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민들의 깊이가 더 이상 내부에서 나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을 세상에 던지면서, 함께 나누어 생각하자고, 그리하여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청하려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2010년 겨울, 『생협평론』 창간호를 펴냅니다. 2008년부터 준비호를 3회 발행하면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를 거름삼아 창간호에서는 크게 ‘특집’과 ‘이슈’ 쪽지를 기획했고, 생협 및 협동조합과 관련된 지구촌 소식들, 관련 책에 대한 서평, iCOOP생협이 보는 세상 만평, 시각자료 중심의 돌발논문 등 네 개 쪽지로 열개를 갖추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특집 기획은 창간호의 특성을 살려 iCOOP생협의 정체성인 ‘윤리적 소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윤리적 소비’에 대한 iCOOP생협의 담론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개인 차원의 윤리적 소비를 넘어 윤리적 소비가 사회의 의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 기획입니다.
이슈 기획은 윤리적 소비와 관련 있는 이슈들에 집중했습니다. 그 하나는 공정무역으로, 투기자본이 판치면서 불공정한 무역이 더욱 번성하는 세상을 짚어보았고, 다른 하나는 4대강 살리기로 죽어가는 강, 그리고 함께 죽어가는 농민들의 생생한 실상을 르브로 담았습니다. 돌발논문은 시각자료가 문자를 소리로 살려내어 청각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논문이기를 희망한 쪽지입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우리가 ‘윤리적’인 미디어 소비자가 될 수 있기 위해 알아야 할 바를 짚었습니다.

『생협평론』은 협동과 나눔 그리고 평화에 대해 iCOOP생협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세상과 나누고 말 거는 통로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떠맡겠다는 자청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은 조합원인 나와 나의 이웃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도발적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iCOOP생협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세상에 던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무성한 응답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창간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른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12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18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26
유럽의 윤리적 소비	이의남 (iCOOP고양생협 이사)	29
창간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37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느냐’는 반문이 최근 한 유통업체 경영자의 트위터링을 통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념’이라는 용어는 토론의 끝이 되게 만드는 쥐약과도 같다. 그래서인지 그에 대한 반문은 소비가 이념적인가를 묻고 늘어지는 대신 다른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소비를 이념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소비가 이념이 아니라면 경영자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데 열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마케팅 전문가들은 소비가 ‘이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그린’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고 ‘빈티지’로 친근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스토리를 구성하기도 하며, 브랜드와 로고라는 무형의 상징 가치를 활용하고 있다.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느냐는 반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대형유통 업체가 파는 값싼 피자로 동네 피자 가게가 문 닫을 지경이 되었다는 말에 응수해서 나온 것으로 안다. 즉 싸고 맛있어서 소비자가 몰리는데 어찌라고? 라는 반문이 들어있는 것이다. 싸고 맛있는 소비 제품 한, 둘을 파악세일 하고, 나머지 상품에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은 이미 고전적인 상술이며,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는 정부 기구도 있다. 내가 만난 스위스의 한 주부는 동네에 정육점이 세 개 있으면 돌아가면서 이용한다고 한다. 동네에 있는 가게 세 개가 골고루 살아남도록 배려해서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명품을 많이 만들어 내는 조그만 나라 스위스에 협동조합이 거미줄처럼 발달해 있다는 것, 세계적인 명품이 만들어지기까지 협동조합 정신으로 무장한 소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뿐인가. 프랑스 골목골목에 있는 마가쟁 뒤 몽드에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수공업품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가 있다. 기계화와 자동화의 흐름에 밀려나는 수공업품을 사주면서 제 3세계의 열악한 현실을 이해하는 공부를 곁들이는 곳이다. 바칼로레아 시험이 끝난 고등학생들이 무료로 봉사하면서 그야말로 이념적 소비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다. 적어도 자본주의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나라들은 소비를 통해 공부도 하고, 소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일반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가 치르는 비용과 치른 비용에 대한 효용을 저울질한 결과 효용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전문용어로 ‘소비자 잉여’가 발생할 때 소비행위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얼핏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된다. 우선 비용이야 화폐 가치로 분명하게 계산된다 해도, 효용은 화폐가치로만 계산될 수 없는 다분히 주관적인 측면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비용’ 자체도 화폐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후 그녀를 모델로 쓴 제품이 홍보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는 김연아 선수의 도전 정신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승리의 기쁨이라는 이념을 소비하는 것이다.

광고의 홍수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요즘 ‘소비’야 말로 이념적이며 이미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들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같은 공장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져서 본체의 제품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외장과 광고 효과를 통해 엄청난 가격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분석해 보였다. 기업들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공헌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로고 등의 상징을 통해 소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세기의 전쟁터는 ‘문화영역’이라고 월러스타인이 선언한 이유도 이런 까닭이다. 소비가 이념적이라는 것을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은 한 발 늦게 깨달았을 뿐이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운동과 소비를 별개의 차원으로 생각해왔다. 사회운동은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와 감시를 해왔다. 약자에 대한 배려, 환경에 대한 고려, 차별에 대한 저항 등의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사람과, 그것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사람이 별개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주장을 하고 그것이 답이 없는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여러 차례 고민하면서, 주장과 요구를 하는 사람과 답변을 하는 사람이 별개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영세상인의 보호, 국내 농산물의 보호 등이 똑똑한 소비자를 통해 일차적으로 가능하다는 간단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유무역을 위한 연쇄 협정에서 서로에게 양허하는 조건을 둘러싸고 기민한 협상을 벌이는 이유도, 양허의 대상이 된 제품 또는 품목이 시장에 보다 잘 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잘 팔릴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자유무역은 관세 장벽을 낮추고 규제와 검열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최종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다.

소비행위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념적 소비 즉 윤리적 소비자 운동이 일어난 것은 세계화의 거센 바람과 관련이 있다. 물론 노동조합 운동과 연관된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난 것은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협동조합운동은 ‘조합원의 개인적 이익과 집합적 이익의 상생’을 위해 소비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소비의 고전적 형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된 소비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운동이라는 고전적 모델을 넘어 윤리적 소비가 본격적으로 강조된 것은, 생산의 세계화, 투기자본에 의한 제조업의 잦은 인수 합병 등으로 소위 ‘세금 없는 자본주의’, ‘노동 없는 자본주의’가 그 실체의 일단을 드러내면서부터다. 세금을 통해 공공의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 생활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과,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설정했던 20세기 사회운동의 토대가 세계화를 통해 침식되면서, 대안운동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서구에서는 ‘윤리적 소

비자 운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윤리적 소비자 운동이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여대생들은 우연히 방글라데시에 있는 네덜란드계 의류공장에서 나이 어린 여공들이 화재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방글라데시의 현장에 달려간 두 여대생은 네덜란드에서와는 달리 방글라데시의 의류공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고 노동조건도 열악했으며, 여공들은 전 근대적인 감시를 받고 일상생활을 규율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도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기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 네덜란드의 의류본사는 방글라데시의 하청공장과 계약을 맺은 네트워크 기업의 형태였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주문 조건에 맞는 결과물을 받으면 그만이었다. 즉,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현지 하청공장은 너무나 영세한 나머지 사고가 나면 공장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을 질 사람은 오리무중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법적 책임이 없는 본사에게 윤리적 책임을 '윤리적 소비'를 통해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우선 네덜란드의 관련 노조조직, 소매상 조직, 시민사회단체, 교회 등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된 의류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더 나아가 네덜란드의 의류도·소매상들에게 해당 회사의 옷을 취급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소비자들을 찾아 나섰다. 깨끗한 옷을 입자는 윤리적 소비자운동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고 이 작은 사건은 큰 울림을 내게 된다. 깨끗한 장난감을 선물하자는 캠페인, 깨끗한 우유를 아이에게 마시게 하자는 운동으로 줄줄이 이어지게 되면서 윤리적 소비자 운동의 새로운 장이 본격화되었다. 즉 윤리적 소비자 운동은 세계화를 통해 일어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운동의 차원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윤리적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을 깊고 넓게 가짐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가 가져다 준 빛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측면이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개인의 소비자 잉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회적 감시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일어나는 노동권과 환경권에 대한 침해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의 하청공장에서 일어난다. 이들 하청공장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공장이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사와 하청공장과의 법적 계약에 의하면 본사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최종 브랜드와 이미지만 소유하고 생산 공정은 대부분 이전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환경권 침해 등은 하청공장 책임인데, 하청공장은 그 규모가 영세하거나 지속성이 없어 책임을 물을 실체가 대부분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를 조직하여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에게 여공의 피가 묻지 않은 장난감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자'라든가, '여공의 피가 배인 옷을 입고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가?', '커피의 향기에 숨어 있는 아프리카 커피 농가 농민의 한숨이 들리는가' 등을 대안적 광고 카피로 활용하면서, 비용과 효용의 논리로 소비하는 일회적인 소비행위에 사회적 의미를 따져 묻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대안적 사회운동으로서 소비자운동은 소비행위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를 통칭하여 '윤리적 소비'라고 하기도 한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건 소비에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된 저간의 사정이다. 소비에 사회적 책임을 붙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도 이미 제도화되어 이제는 상식적인 용어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인 윤리적 소비는 해당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노조 조직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협동조합이 발달하고 있으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고, 시민단체나 교회가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 한 국가의 시민사회의 발전 역량에 따라 윤리적 소비가 발전하는 방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소비자로서 한 개인의 정체성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개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윤리적 소비자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구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화에 대비하여 소비자를 윤리적 소비자로 바꾸는 작업을 바닥부터 다져왔다.

윤리적 소비는 각 사회 시민사회의 역량과 관심 사안에 따라 고전적인 협동조합형 소비에서 공정무역,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참여형 소비 등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에서 사회적인 것을 어느 범위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윤리적 소비의 개념은 한 없이 넓어질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가? 이윤의 일정 부분 사회적 환원이 이루어지는가? 제 3세계 산지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고 만든 제품인가? 환경 침해를 하지 않는가? 아동을 고용하지 않았는가? 양성평등 원칙을 지켰는가?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인가? 등등 특정한 사회적 의제를 걸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킨 제품을 우선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적 소비자 운동은 집단적인 작업이고 전략적인 접근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시민적 소비자가 되기 쉬운 품목을 설정하고, 이미지가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호품, 패션 용품, 또는 유아용품 등이 자주 윤리적 소비자 학습의 대상 상품으로 선정된다.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 용품 또는 운동화 등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윤리적 소비를 선도할 수 있는 사회집단이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 품목 선정은 달라질 수 있다.

여하튼 일반 소비자를 윤리적 소비자로 탈바꿈 시키는 것은 자연스런 개인의 각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교육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윤리적 소비자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대표는 자신의 경쟁 상대가 기업의 홍보 또는 마케팅 담당자라고 했다. 서구의 윤

리적 소비자 운동은 이제 윤리적 소비자를 위해 윤리적 상품을 지정하는 인증제도와 전문 유통업체 등을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해마다 윤리적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리적 소비가 대세가 되면서 기존의 제품도 윤리적 상품과 비슷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의 홍보 전략도 친환경이나 반차별 등을 이미지로 내세우는 게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소비자 운동이 시장 자체의 성격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고전적인 소비자 운동은 제품의 성분과 질 등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모토로 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에 ‘탈규제’가 일종의 대세 또는 추세가 되면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시민사회단체가 대신하는 양상으로도 변화가 일고 있다. WTO의 탈규제 논리가 확산되고 제도화되면서 공동체 규제 또는 사회적 규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소비의 블록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의 블록화 현상은 소비행위에 대한 공동체적 규제라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윤리적 소비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협 운동이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도농 직거래가 이미 일반화 되고 있다. 소비의 블록화가 일어날수록 제품에 대한 전문 과학적 지식의 시민적 공유, 시민에 대한 설명책무로 이어지면서 공통의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특히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민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시민과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전적 소비자 운동과 윤리적 소비자 운동이 결합되어 소비자 주권意識이 높아지게 되고, 소비자에 대한 생산자의 설명책임에 대한 요구 기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윤리적 소비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을까? 스웨트 샵(sweat shop)이라는 운동이 있다. 제 3세계에서 아동을 고용한다거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만든 제품을 불매 운동하는 것은 기본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양성평등, 친환경 기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기준을 내걸고 윤리적 소비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윤리적 소비를 하려면 제품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책임 있는 단체나 조직을 선정하는 것과 구성하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에 대해 던지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면 특정 제품이 아동노동을 고용하지 않은 제품인가? 또는 여공의 피가 묻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 산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곳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누가 답변을 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 가지 방법은 기업 쪽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 또는 생산현장에 있는 책임 있는 노동자 단체와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된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를 통해 생산 현장과의 대화를 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조직이 포도송이처럼 만들어지는 것 즉, 책임 있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는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윤리적 소비운동에서 가장 대중화되고 있는 공정무역운동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만들었고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 체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런 인증 마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증마크를 관리하는 단체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브랜드에 그치게 된다. 또한 이런 인증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윤리적 상품이라는 또 다른 브랜드의 소비자에 불과하게 된다.

지금 우리사회에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의 생산과정, 생산 재질, 생산 장소, 소비가 미치는 영향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어도 이런 식의 관심은 사회적 소비,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소비자 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라도 윤리적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제품 생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행위와 사회와의 관계를 파악하게 됨으로써 책임 있는 시민이 되게 할 수 있다. 일단 책임 있는 시민이 되면 ‘세금 없는 자본주의’, ‘노동 없는 자본주의’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 생협연합회 국제팀장)

이 글은 윤리적 소비에 관한 담론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자가 느낀 주요 검토과제를 형식을 갖추지 않고 써내려간 글이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윤리적 소비에 관한 사상적, 이론적인 주장을 전개하기에 필자의 경제학적, 윤리학적인 연구가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운동, 특히 필자가 몸담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맥락에서 윤리적 소비를 거론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느끼는 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 이 글을 구성할 작정이다. 필자가 보기에 윤리적 소비 담론에서 고민되는 경제학적인 논점과 한국에서의 논점을 한 가지씩 제시하고, 여러 나라의 생협이 전개하는 윤리적 소비를 협동조합 운동의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1. 시장경제가 주축인 현실 경제에서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경제학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 ‘공감과 관여’

알다시피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주류경제학(미시경제학분야)에서 ‘소비’는 생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비자(가계)란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의사결정 단위로, 소비자의 소비행동(노동, 투자, 구입)을 통해 얻은 소득이 생산요소(노동력, 자본)로 흘러가며, 소비와 생산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가운데 경제는 굴러간다고 설명한다.

이 때 소비자의 행동목표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같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효용극대화의 원칙에 따르며,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정된 예산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선호)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소득, 가격, 재화의 종류(엔겔지수에 반영되는 식비 등의 필수품인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사치품, 내구소비재, 교양오락 등의 정상재인지, 소득이 늘 경우 해외여행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 여행은 감소하는 예처럼 대체재의 관계인지 등등)라고 하겠다.

이런 이론적인 근거에서 본다면 최적의 소비, 합리적인 소비란 같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최대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 이용하는 것이므로, 열등한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격과 품질, 즉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결과와 심리적인 만족 그 자체일 뿐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이 ‘실질소비’가 정상이라고 언급한 것은 어찌 보면 이런 교과서적인 인식을 반영한 정상적인 소감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이것만이 소비행동의 원칙이며 소비자선택의 전

부인가 하는 점이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행동경제학자들의 실험을 보면 소비자의 선택은 정황(context)에 따라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선호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실험 결과는 쉐이퍼와 시몬슨, 츠베르스키(Shafir, Simonson & Tversky)가 발표한 것으로, 여러 선택지가 있을 때 소비자는 이유와 스토리를 선택한다(reason-based choice)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신념과 심적 태도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쳐 재화나 서비스 그 자체에 모순, 결점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마음이 가는 물품을 선택한다.²

현실의 인간은 눈앞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동물이 아니라, 타자와 협력하는 호혜적인 존재이며, 유희를 즐기는 존재이고, 갈등하는 복잡한 존재이므로 소비자의 소비행동에는 이런 인간의 전체적인 특성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행동경제학이 발견해 낸 인간 경제행동의 다양한 성향(타자를 의식하는 마음, 자신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무임승차한 자와 규칙을 어긴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공정한 거래가 아닐 경우 거부하는 성향 등등)을 보면,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소비자 선택과 선호에 관한 이론은 다시 정립되어야 할 것 같다.

주류경제학은 이런 복잡성의 유기체인 인간의 본성에서 다른 나머지를 버리고 오직 ‘자기가 이익의 극대화만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인’을 경제행위의 주체로 설정했다. 주류경제학은 그 근거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과 ‘이기심(self-love)’에서 찾는다. 「국부론」의 한 소절(Smith, 1776. pp.26-7)만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모든 경제활동이 조정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1776)보다 먼저 「도덕감정론」(1759)을 집필했으며, 여기에서 공감(sympathy)을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를 지니지 않는 관찰자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때 성립하는 인간본성의 현저한 성질’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런 공감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아끼며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행위가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공감에 기초한 자유로운 경제행위는 공정한 경제행위를 뜻한다. 주류경제학은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으므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아담 스미스의 경제론은 공정한 경제운용을 강조하는 이들보다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시장독점이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자본가들에 의해 더 많이 인용되었다.

이에 아마티야 센(Amartya.K.Sen)³은 ‘(인간의 경제행위의)동기와 시장에 관한 스미스의 복잡한 견해가 잘못 해석되고 또한 감정과 행동에 관한 윤리적인 분석이 간과된 현대경제학의 발전이 윤리학과 경제학의 괴리를 낳았다’⁴ 고 지적하였다. 센은 주류경제학의 이런 주장

1 이마트의 피자출시에 항의한 네티즌에게 정용진씨가 트위터를 통해 ‘본인은 소비를 실질적으로 하시나요? 이념적으로 하시나요?’ 라고 묻은 게 논쟁으로 외자됨. 중앙일보 이필재 기자의 블로그 참조.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jelpj&folder=2&list_id=11897460

2 友野典男, 『行動経済学—経済は「感情」で動いている』, 2009년 13刷, 光文社新書, pp.209-212.

3 1933년 인도에서 태어난 센은 1959년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경제발전이란 인간의 자유와 잠재능력(capability)을 확대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보고, UNDP와 협력하여 인간과 사회발전의 척도를 재는 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하였다. <윤리학과 경제학> (한울

을 ‘합리적인 바보’의 생각이라고 비유하며 경제학 속에 윤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과제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주류경제학에서 상정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전제조건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윤리를 경제 행위에서 거세함으로써, 경제발전이 인간의 행복(센이 볼 때 행복은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확대)과 사회발전을 추구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의 행복과 사회발전’이란 두 개념이 동시에 존재함을 주목해서 보자.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은 윤리학적 문제이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은 타인의 행, 불행과 관계없이 자신의 욕구가 실현될 때 만족과 행복을 느낄지 모르나, 보통의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함께 자기 주위에 함께 사는 아들-가족, 이웃, 친구, 지구 곳곳에 사는 인간과 생명들이며, 세계화와 더불어 그 인식은 더욱 확대된다-이 불행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을 느낀다. 사회 발전이란 더불어 행복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로 경제활동에서 자기 이익이라는 동기만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여러 동기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아주 중요하다.

다양한 여러 동기 중에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윤리적인 물음을 경제학이 받아들이기 때 경제학은 훨씬 윤택해지며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 경영 현장에서는 팀워크의 중요성, 임직원의 윤리를 중시하면서도,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 가르칠 때는 효용의 극대화란 원칙만을 내세우는 경제학 교육을 넘어서 왜 윤리적 소비가 등장하는지를 경제학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거세된 윤리를 회복시킨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센이 언급한 주요 개념 중 하나는 관여, 현실참여, 또는 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코미트먼트(commitment)’이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기초로 제시한 공감(sympathy)은 타자에 대한 관심이 자신의 효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아동학대 뉴스를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다. 반면 코미트먼트(이하 관여로 쓴다)는 아동학대 뉴스를 들었을 때 내 아이가 학대당한 것은 아니지만 학대는 나쁜 것임을 알고 이를 없애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가 유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소비자의 ‘관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예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던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퀘이커교도들은 노예노동을 비윤리적인 착취라고 주장하며 철폐운동을 펼쳤다. 반노예법이 영국 의회에 상정된 것은 1783년이지만, 식민지에서 노예무역이 철폐된 것은 1807년, 카리브해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예노동이 철폐된 것은 1834년으로 3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러나 퀘이커교도들의 현실참여가 과거에는 비즈니스 관행으로 당연시되던 노예노동과 노예무역을 모든 영

국인들이 비윤리적인 착취로 비난하고 금지하게끔 시장을 아예 바꾸어 놓았다. 이런 소비자들의 현실참여는 19세기 말부터 소비자운동으로 본격화되고 1980년대에는 ‘윤리적 소비자’라는 용어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윤리적 소비’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영국 최대의 생협인 코퍼라티브그룹(Co-operative Group)에 속한 협동조합은행(The Co-operative Bank)이 2000년에 펴낸 보고서 「누가 윤리적인 소비자인가?」⁵ 이다. 보고서에 윤리적 소비자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없다. 있다면 관여하는 소비자로 자신의 신념을 소비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이다. 따라서 영국의 생협이 윤리적 소비에 포함시키는 소비행동은 윤리투자,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 구매, 공정무역 물품 구매자, FSC(산림인증제도)⁶ 목재 구매, 무연휘발유와 저황디젤 이용, 재활용휴지, 파머즈 마켓이용, 재생에너지 사용, 자연방사 달걀 구입 등이다. 이 윤리적 소비운동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기존시장을 잠식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거론한다.

2. 참된 윤리적 소비란 따로 있는가? 또한 그것은 단 하나의 길인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 소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iCOOP생협이 이념으로 내걸면서이고, 용어 자체가 보급된 것은 3년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담론이 무척 빈약한 상태이다. 여기에 「천규석의 윤리적 소비」(2010)가 논쟁을 걸었다. 무척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다. 지면 제한이 있어 천규석 선생의 주장을 충분히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읽은 주된 주장은 ‘유럽 및 한국의 생협들이 펼치는 윤리적 소비운동은 상대적인 윤리성은 있을지언정 소비를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마침내는 시장과 자본주의도 미화하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p.5), 소비에 꼭 윤리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고 싶다면 그것은 (지역)자급소비 밖에 없을 것이다(p.5), 생물의 종자마저도 독점하는 미래의 농업혁명이 물고 올 파국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두루 가난하게 살자는 소농두레공동체혁명 밖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p.346)’ 등이다. 특히 공정무역을 매섭게 비판한 대목에서는 ‘공정무역으로 득을 본 제3세계 농민들의 향상된 생활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며, 그것이 진정한 향상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20~30% 더 받은 돈으로 공정무역품이 아닌 다국적기업의 세계무역 식량 등 수입품을 더 소비하는 것이 향상된 생활인가?(p.37) 공정무역의 대상물품이 사탕수수, 커피 등 단작재배작물이란 점과 결국은 세계무역의 분업체제 속에서 종속을 면하기 어려우며, 국내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질타한다. 천규석이 공정무역의 현실에 대해 지적한 그들은 존재하며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

아카데미, 2009), <불평등의 재검토>(한올아카데미, 2008) 등 한국에서도 번역서가 다수 출판되었다.

4 アマルティア・セン, 『経済学の再生—道徳哲学への回帰』(On Ethics and Economics), 麗澤大学出版部, 2002, p47.

5 Roger Cowe and Simon Williams, Who are the ethical consumers?, The Co-operative Bank, 2000.

6 리우환경회의 직후인 1993년 발족한 국제적인 비영리단체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인증시스템으로 원목 벌채에서 간벌재의 유통, 가공의 과정까지를 모두 인증한다. 목적은 산림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사회에 이익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목재에 인증라벨을 붙여 소비자가 선택케

만 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지역)자급 소비나 소농두레공동체혁명만이 유일하고 건전한 대안(본인은 혁명이라고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만이 경제활동의 동기라고 주장하는 것의 대극에 서있는 근본주의적인 태도라는 점이다. 근본주의는 세상을 명확하게 가르고 실천을 선명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을 더 낮게 바꾸는 데는 실패한다는 점이 역사의 교훈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며 인간의 행동에는 다양한 동기가 있으며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에 근본주의는 대안을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다. 강요당한 대안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는다 해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을 자유롭게도, 행복하게도 만들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가 수렵채취에서 농경으로, 자급자족에서 물물교환으로, 화폐를 매개로 한 시장경제로 발전해 온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인류사의 과정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한 거대한 동력과 당시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있었다. 자급소비시절이나 소농두레공동체가 가능했던 우리 역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상 수준 높은 자치를 이루었던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을 뿐 아니라, 그 당시의 질곡과 모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인간의 의지가 또한 시장경제와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체제를 성립시켰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둘째, 공정무역은 국내 농업에도, 제 3세계 농업에도 종속적인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그의 주장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폄하하는 일면적인 판단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공정무역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무역관행을 바꿀 것이며 제 3세계의 자립적인 농업의 재생을 이끌어낼 것이라 믿는다. 천규석은 공정무역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은 제 3세계 농민이 결국 다국적기업의 교역품을 더 많이 구입하게 되므로 향상된 생활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 농민들은 우선 자녀를 교육시키고 가족이 먹을 채마밭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고, 먼 데서 물을 길어오던 중노동에서 부인과 딸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우물을 판다. 그리고 더 나은 발전과 이익확보를 위해 생산자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런 생활상의 진보 없이 현재의 단작재배체제 하의 농업노동자 신세를 벗어나 자립을 이루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공정무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과 소농민의 자립이며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이다. 영국 가디언지의 기자는 ‘자유시장주의자도, 급진적인 좌파도 공정무역을 싫어한다…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와 남미의 공정무역 생산현장을 방문해보는 사람이라면 무척 많은 협동조합이 공정무역을 하면서 소농을 변화시키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집단적인 힘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음을 깨닫

했다. 2010년 현재 인증현황은 세계 79개국, 1,011곳, 인증면적은 129,172,199ha로 이 중 북미대륙은 전체 인증면적의 37.68%, 유럽은 44.17%, 남미및 카리브해국가 8.56%, 아프리카 5.66%, 아시아2.65%, 오세아니아 1.27%이다. 아시아에서는 그만큼 삼림 및 지역수탈형 목재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인증시스템은 열대우림의 벌채에 항의하는 유럽시민들의 운동의 결과 탄생했으며 국제본부 사무실은 독일 본에 있다.

www.fsc.org

7 영국 가디언지 존 비달(John Vidal)기자의 11월4일자 블로그에서 <http://www.guardian.co.uk/global-development/poverty-matters/2010/nov/04/fair-trade-under-attack>

게 된다’⁷고 증언한다. 이들 생산자들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윤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발전적인 측면보다도 소득이 늘어난 제3세계 농민이 구입하는 생활재가 다국적기업의 생산품이거나 수입품이라는 점이 더 문제라면 이런 실제 그들의 처지가 되어보지 못한 억지주장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셋째, ‘참된 윤리적 소비란…’처럼 윤리적 소비 중에서도 참된 것을 따지는 태도, 또는 윤리적 소비를 생태주의란 단일이념과 결부시켜 단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획일적인 주장은 인간을 통합하기 어렵다. 만약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감히 조어를 만든다면 필자는 이를 ‘생태전체주의’라고 표현하고 싶다. 필자가 보기에 윤리적 소비는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인 맥락, 소비자의 의식수준, 그 사회의 주요 해결과제, 운동주체의 이념과 성격에 비추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그 다양성이 윤리적 소비를 더욱 촉진하고 보급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생태위기가 심각하며, 식량자급률이 위험수준에 달한데다, 농촌은 후계자 없이 해체수준에 이른 점은 이미 많은 이들이 깨닫고 있다. 그러나 그 해결방법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방식의 전환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구가 획기적으로 줄어야 하기 때문이다⁸. 또한 대중들의 의식주의 기본욕구와 기호를 자연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은 장기적인 변화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른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넉넉한 농촌공동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안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동자를 벗어나 모험하고 세계를 경험하고 일탈하고 싶어한다. 자급자립적인 공동체의 존재, 스콧과 헬렌 니어링 부부의 삶처럼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부여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하게 하는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을 담을 용량도 안 되는데 그 길만이 대안이라고 한다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 대중운동에는 다양한 대안이 있으며 그 대안들이 얹혀지고 겹쳐질 때 세상은 이미 한걸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지 모른다. 소농공동체의 길은 윤리적 생산의 모습일 수 있으며 많은 대중의 윤리적 소비와 연대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3. 생활협동조합이 선택한 윤리적 소비

협동조합의 정신적 아버지라고 하는 로버트 오웬은 자본주의의 폐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농업과 공업을 주축으로 한 인구 2천명 규모의 협동조합공동체(co-operative community)를 구상하고 이 길이 곧 협동조합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협동조합공동체는 성공하지 못했다. 근대적인 협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이 된 것은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었다.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은 당시 오웬 주의자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8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주임교수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포기하려면 90%의 인구가 줄어야 하고 농경목축까지 포기하려면 99%가 줄어야 한다’고도 말한다.(아시아경제 사이언스 포럼 2010년 5월26일, ‘위험사회의 진실은’)

배당금지와 이익적립(공동체를 건설할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조합원의 준별(공동체이념을 받아들일 만한 노동자)을 포기하여, 누구나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조합원에게는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고배당을 실시했다. 로치데일공정선거자조합이 당시 성공할 수 있었던 경제적인 이유는 ① 정직하고 순정한 물품의 품질 ② 시가판매주의(계약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에 기초해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했음) ③ 이용고배당을 들 수 있다.

그 후 156년이 지났으나 영국의 생협운동은 협동조합공동체를 따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시민)의 일상 삶 속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그들의 운동은 독점자본을 타파하고 노동자대중의 소비를 책임지면서 영국의 소비시장을 불공정과 독점자본에게서 보호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비자를 계몽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9년부터 윤리적 소비를 전면에 내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8년까지 10년간 영국에서 윤리적 소비는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

〈영국의 윤리적 소비(1999-2008)〉

단위: 백만 파운드

윤리적인 음식료품	1999년	2008년	에코여행과 운송	1999년	2008년
유기음식료품	390	1,986	녹색 자동차	3	282
공정무역	22	635	공공기관	28	459
열대우림보호 인증	-	369	책임여행사업체	74	112
파머스 마켓	131	220	친환경관광시설	-	19
채식식품	452	768	여행보이콧	70	800
자연방사 달걀	173	415	소계	175	1,672
자연방사 닭고기	37	174	윤리적개인용품		
무첨가식품	-	51	윤리적 화장품	163	513
지속가능 생선	-	128	윤리적 의복	4	172
돌고래를 해치지 않는 참치 ⁹	189	281	재활용옷구입	195	402
소계	1,926	6,096	천귀저기	-	3
녹색주거			자선가게	133	286
에너지효율형 전기기구	136	1,893	의복 보이콧	159	384
에너지효율형 보일러	212	1,942	소계	653	1,760
에너지효율형 전구	10	79	커뮤니티		

9 Dolphin friendly tuna는 참치어획 시 돌고래가 주변에 없음을 확인하거나 돌고래가 어망에 걸려들었을 경우에는 풀어주었음을 확인한 참치에게 붙이는 인증라벨로 인증내용에 따라 다양한 라벨이 있다.

재충전 건전지	14	79	지역산 구매	1,586	2,108
녹색에너지	-	297	기부	2,570	2,987
소규모 전력	-	36	소계	4,156	2,987
녹색주택론	4	455	윤리적 금융		
윤리적 세탁용품	2	41	윤리적 예저축	2,149	6,976
지소가능목재와 화장지	351	1,325	윤리적 투자	2,872	6,825
재사용가정용품 구매	672	913	신용협동조합 ¹⁰	149	478
소계	1,401	7,024	윤리적 지주회사	1	74
			소계	5,171	14,354
			합계	13,482	36,002

출처: Ten Years of Ethical Consumerism:1999-2008, The co-operative bank, 2009

1999년에 약 25조 원 규모이던 윤리적 소비지출이 2008년에는 약 65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영국과 인구차이가 별로 없는 한국의 친환경시장규모 전체가 3조 7천억(2009년)원이니 그 실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유기농산물, 지역산농산물 구입과 지역단체 기부 등 한국의 생협이 주력하는 분야 외에도, 십년 전에는 통계가 잡히지 않던 분야인 열대우림보호 인증, 녹색에너지 등 새로운 소비자의 의식적인 소비가 이루어져 그만큼 생산지형을 바꾸고 있다.

필자는 생협은 시민(소비자)의 사업이며 독점자본의 횡포를 저지할 정도의 독자적인 생산, 유통을 추진할 수 있는 양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의 생협은 공정무역을 포함하여 윤리책임인증인 SA8000을 채용하고, 생산업체가 준수하도록 협약을 맺어 작업장의 노동권을 보호한다.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한국의 생협에서 보면 그리 체감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모든 생활재를 취급하는 유럽생협에서 SA8000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일부 제한된 물품에만 높은 생태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나머지 소비생활은 알아서 해야 하는 한국의 생협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비윤리적인 생산관행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 소비자의 협동조합인 생협은 윤리적 소비의 여러 모습 가운데, 조합원 대중의 소비를 조합원의 공감과 관여에 기초해서 점진적으로 바꾸어 놓는, 진지전을 쌓는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다. 

10 영국은 일찍부터 생협안에 협동조합은행이 있어 신협은 그리 발달하지 않았다. 신협법이 제정된 것은 1979년이며, 2002년 금융시장서비스법으로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된 경제적 약자에게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 신협이 급속히 늘어났다.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윤리적 소비의 등장

iCOOP생협에서 윤리적 소비라는 단어가 처음 거론된 것은 2006년 2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농업과 소비자운동의 과제와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다. 이 심포지엄은 2005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치른 ‘우리쌀지키기 우리밀살리기 일만인소비자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사회협약을 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기에서 제 1발제를 맡은 이정옥 교수(대구가톨릭대)는 위기에 놓인 한국농업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로 ‘생산을 고려하는 소비자 운동’을 벌이는 것인데 그런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윤리적 소비자’라고 하였다. 즉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소비자만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주권주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산이 되게 하려면,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 자연, 이웃을 배려하는 소비가 필요한데 이를 윤리적 소비라 부르며, 생협이 그동안 해온 친환경농산물, 우리 밀 소비 등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 iCOOP생협이 윤리적 소비운동을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10년 활동에 대한 정리와 정체성 선언

2007년은 iCOOP생협이 공동으로 물류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이를 위해 10년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협동조합 정의와 한국생협연합회·연대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약 6개월 동안 8차례의 학습과 연구로 발전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iCOOP생협은 2008년 1월 29일 6차 정기총회에서 ‘윤리적 소비로 인간다운 삶을! : iCOOP생협 10주년 기념 선언’을 하게 되었다. 선언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연의 지속성과 사회의 지속성이 파괴되고 있다. 생태계는 파괴되고 노동하는 인간은 주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런 배후에는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고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협동조합 특히,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자본의 폭력적인 지배에 대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저항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넷째, iCOOP생협은 선배 협동조합 운동가들의 이런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발전시킨다. 다섯째, 이러한 협동조합 운동에서 iCOOP생협이 찾아낸 정신 가운데 하나는 ‘윤리적 소비’다. 그리고 iCOOP생협이 지난 10

년 동안 실천해 온 활동도 윤리적 소비의 범주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여섯째, 윤리적 소비는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를 보전하여 사람이 사는 사회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일곱째, 이를 위해 iCOOP생협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지역사회, 한국 사회, 나아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개방적인 운동체여야 한다.

일반적인 윤리적 소비의 기준과 iCOOP생협의 재해석

윤리적 소비의 기준은 나라의 환경과 경제 수준 그리고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유럽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기준(환경보전, 인권, 동물 복지, 정치 민주, 생산 지속 가능성)이 다른 대륙, 다른 나라, 다른 집단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윤리적 소비’를 고민하고 실천한 건 몇 년 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단계는 물론 개별 단체에서도 정립한 사례가 많지 않다.

iCOOP생협에서는 윤리적 소비의 기준을 ‘인간과 노동’, ‘식품안전’ 그리고 ‘농업과 환경’으로 정했다. 그 기준 내용을 보면, 첫째, 인간과 노동의 내용은 ① 조합원 자치와 민주적인 운영, ② 아동 착취 노동 금지와 인간적 일자리 창출, ③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차별 금지, ④ 공정무역을 통한 세계 평화에 기여 등이다. 둘째, 식품 안전은 ① 화학 첨가물의 엄격한 규제와, ② 농약, 화학 비료, 중금속의 감소다. 셋째, 농업과 환경은 ① 환경 문제의 정점은 지구 온난화이며 이를 위해 화석 에너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농업과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유기농업을 지향하며, ③ 서민들도 유기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의 추구 등이다.

한편 이러한 기준들은 유연하게 시대적, 사회적 환경과 요구에 따라 비중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금융만이 아니라 실물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 실업의 증가로 빈곤과 먹을거리의 양극화가 심화될 때는, 인간과 노동의 기준을 환경보다 더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부유층들의 값비싼 취향과,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연에서 오래 보전되어온 나무들을 베어 가구 등으로 만드는 일에는 다른 어떤 기준보다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iCOOP생협의 윤리적 소비 실천

윤리적 소비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더 크다. 그리고 그 실천은 조합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협동조합적이다. 이런 전제 속에서 iCOOP생협이 실천해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운동은 2008년 광우병 의심 소 수입 반

대를 위한 캠페인, 기자회견, 가두시위, 일인 시위 등이 있다. 특히, ‘엄마가 뽕났다’라는 드라마와 슬로건을 연계시켜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약 10년 가까이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무상으로 급식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급식조례 제정, 학교급식법 개정과 같은 법제도 개선 운동뿐 아니라, 각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모니터, 운영위원 참여 등의 실천 운동을 해왔다. 둘째, 농업과 환경은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대표된다. 그 중 구체적인 실천 두 가지만 정리하면 우리 밀 소비 운동과 논에 다양한 생물이 살도록 하는 농법을 하는 것이다. 2010년 iCOOP생협이 계약한 우리 밀 재배 규모는 5천 톤 정도인데, 이는 2002년에 한국 전체에서 생산된 우리 밀 규모보다 많은 양이다. 그리고 논에 다양한 생물이 살도록 하는 농법을 확산시키면서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논을 보전해야하는 대상으로 선언하게 하였다. 셋째, 사람과 노동에서는 공정무역과 사회적 약자의 생산물품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 공정무역을 통해 제3세계 생산자를 지원하고, 장애인 등이 생산한 물품을 생협에서 취급해 소비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이런 운동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iCOOP생협에서 ‘윤리적 소비’가 시작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내용과 실천 운동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앞에서 서술한 윤리적 소비는 iCOOP생협만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큰 흐름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는 지역사회와 자연, 그리고 인간 개개인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협동조합은 타인과 자연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소비와 생산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이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를 하면서 농민 생산자, 가공식품 생산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윤리적 소비¹⁾

이의남 (iCOOP고양생협 이사)

1. 서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 상품과 생산방법, 노동조건(임금과 작업환경), 인권 등의 윤리적 가치를 기준으로 소비결정을 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주의는 윤리적 무역활동을 받쳐주는 발전적인 현상이다.

윤리적 사업을 실행하는 데는 수많은 동기가 있지만-예를 들어 윤리적 사업실천이 특히 환경에 대한 책임감,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 ‘윤리적 소비자들’의 요구가 가장 핵심 열쇠이다.

많은 사업체들이 이것이 바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윤리적 방법을 채택한다. 소비자들의 기호와 기대가 변하여 좀 더 분별력이 생겼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 식품조달과 외국여행의 세계화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욱 모험적이 되었고, 식품의 산지를 알고 고하는 소비자들도 더욱 많아졌다. 또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추구하고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추세도 높아졌다.

윤리적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은 기존 식품시스템의 정직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진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다. 많은 윤리적 소비자들의 관심이 생산자나 환경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문제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도덕적 문제가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지만 식품 논쟁의 시대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Nicholson-Lord, 1999)

윤리적 소비이론은 윤리적 소비자의 행동을 촉발하여 사업수행에 신속한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윤리적 소비자에 대해 경험상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쇼핑을 할 때 어떤 가치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앙케이트에 답한 것과 실제 구매행동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다. 더욱이 윤리적 소비자들을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다. 무엇이 그들에게 윤리적 문제를 의식하게 만들며 그들의 가치를 반영해서 소비패턴을 바꾸게 하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윤리적 무역’을 경제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양심에 따른 무역의 형식으로 정의하며, ‘윤리적 소비자’란 사회적이고/이거나 환경보호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자연자원분야에서 윤리적 무역은 공정무역, 유기농산물의 무역, 삼림처럼 지속가능하도록 관리되는 자원에서 생산된 상품과, 윤리적 경영법에 따라 생산된 가공품과 신선식품의 무

1 본 글은 영국 그리니치 대학교의 자연자원연구소(Natural Resources Institute)에서 2001년 발간한 정책시리즈 12 「윤리적 소비자와 윤리적 무역: 연 보고서에 대한 개관」을 번역, 발췌, 정리한 내용이다. 그리니치 대학교의 자연자원연구소는 환경과 자연자원 분야의 연구와 상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기술센터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의 사용과 능률적인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 훈련을 수행하는 곳이다.

역을 포괄한다.

2 윤리적 소비

1) 윤리적 소비의 정의

소비자운동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변화를 위한 힘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이 논리는 광고와 브랜드명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거대한 힘을 볼 때 제한적으로 불일치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힘으로 기업이 사회에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역할로 기업을 책임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다.

소비자운동을 사회변화의 도구로 본 저자들도 있다(Adams,1989; Ekins,1989). 그러나 Smith(1990)는 기업의 책임은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대중의 주의를 끌기는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구매한 상품에 대해 분명하게 불만을 표현하는 일은 비교적 쉽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보이콧하는 소극적 의미의 '윤리적 구매행동'에 대해 말하면서도, 윤리적 특성을 가진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윤리 구매행위의 기회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자운동의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윤리 구매행동 - 윤리적 특성을 지닌 상품의 구매

둘째, 소극적 윤리 구매행동 - 보이콧, 비윤리적 성질을 가진 상품 사지 않기

셋째, 소비자 운동 - 로비활동, 직접행동 등

윤리적 소비는 초기 소비자운동에서 진화해온 것으로 보인다. Lang과 Hines(1993)는 소비자운동을 세 가지 움직임으로 분류했다.

첫째, 가격에 맞는 가치. 생산 기본정보와 꼬리표 달기(상품의 내용과 생산방법).

소비자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운동.

둘째, 상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기업의 책임문제와 관련

셋째, 환경보존주의와 시민권의 결합

윤리적 소비는 동물복지, 환경, 인권/노동조건과 공정무역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세 항목은 각각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즉 지지하고 촉진시켜야 할 생산품과 실천, 유감으로 생각해서 보이콧해야 하는 생산품과 관행을 말한다. '윤리적 소비'에서 더 발전된 것이 '지속가능한 소비'이다. 지속가능한 소비란 '많은 정책들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소비자나 생산자가 충분한 환경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특정 시장분야의 상품소비보다 훨씬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

가 달성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생각'이다(Robins and Roberts, 1998). 지속가능한 소비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다.

2) 윤리적 소비의 발생률

녹색 및 윤리적 소비자의 가치에 대한 여론조사와 실제 판매량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3) 소극적 윤리 구매행동

연대에 기초한 공정무역 상품은 예외로 하고, 수년 동안 윤리적 소비의 주요내용은 거부하는 구매행동이거나 보이콧이었다. 일부 보이콧 운동은 운동단체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네슬레 분유 보이콧 운동이 그 성공적인 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동물실험, 공장형 농업, 무기 산업 등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해 개인의 입장에서 구매를 거부하거나 거부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이슈에 높은 반응률을 보여주는 예로 동물실험을 행한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응답이 50%(1990. Mintel 보고), 공장형 농장 생산품에 대한 거부 의사는 28%로 집계(1991. 5.2 Guardian 인용)된다.

그러나 위의 항목들이 언급되지 않은 조사에서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가격이나 상품의 질을 제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판매 유효기간 같은 요인을 꼽았다. 즉 윤리적 소비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언제나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는 않으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 대부분은 조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지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은행은 특별히 윤리적 소비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초기 연구에서 은행고객들이 억압정권에 대한 무기수출, 인권, 환경 파괴와 같은 포괄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협동조합 은행. 1992). 그로 인해 협동조합은행은 이런 문제와 관련된 회사에 서비스를 거부하는 정책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이 윤리정책은 소극적 투자 기준을 보완하여 적극적 투자 기준으로 진화했으며, 또한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사업체를 지원하고 고무하였고, 은행 고객의 95%가 이 정책을 찬성했다(Co-operate Bank,1999).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지가 도출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최소 노동조건을 찬성하는데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으며, 표본의 92%가 영국회사에 이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생산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발도상국가의 상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이슈〉

	항목이 언급되었을 때
외관/패션, 스타일, 트렌드	31%
유용성	16%
상품명	16%
질	60%
환경에 최소의 손상을 가져오고 그 상품의소유가 환경 친화적인가	44%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임금을 받고 있나	36%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에서 생산된 것인가	42%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인가 (새로운 성분을 동물에게 실험하지 않은)	40%
원산지의 인권에 대한 보고	28%
필요 (그 상품을 구매하려는)	40%
모두/전혀 없다/모른다	7%

출처 : CAFOD, 1997

1995년 협동조합 도매협회(CWS)를 위한 갤럽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1990년보다 소비자 윤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더 발전된 점은 적극적 윤리 소비행동의 빈도가 증가한 것이다.

4) 적극적 윤리 구매행동

‘윤리적 생산품’이라는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적극적 구매전략을 시도해 온 윤리적 상품시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공정무역

1996년 공정무역상표 커피 판매량은 6.6백만 파운드로 전체 판매량은 39%까지 증가했다. 공정무역 커피 브랜드에 대하여 소비자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나 개념으로서 공정무역을 인식하는 수준은 낮았다.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유럽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개념이 덜 알려진 EU 지중해 연안 국가와 비교해 북유럽과 중부유럽에서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높은 수준이었다. 유럽에서 최고 구매율은 네덜란드로 슈퍼마켓에서 공정무역상품 이용도가 아주 높았다(구매자의 57%가 슈퍼에서 구매). 유럽 전체로는 29%가 공정무역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11%가 적어도 한 번 이상 구매했다고 주장했다(EU,1997).

● 유기농 상품

영국의 유기농 시장은 1996년 과일과 채소가 유기농 판매 44%를 점유하며 석권하고 있다. 유기농 육류와 낙농식품은 최근 일어난 식품공포의 결과로 더욱 의미심장해졌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1998년 40%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이 영국농민들의 대세가 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이유(1998년 조사)는, 항생제를 피하기 위해서(83%), 환경 친화적이라는 믿음(75%), 가축의 집약적 사육 걱정(70%), 맛(68%), 지역농민 지원(40%), 광우병 걱정(36%)이라고 답했다.

3. 윤리적 소비자

1) 윤리적 소비자의 범주

윤리적 소비자는 다양한 타입으로 분류된다.

〈Roper/S.C Johnson 녹색소비자 구분〉

True-Blue Green	11%	가장 활동적인 녹색소비자들. 녹색운동의 지도자들
Greenback Green	11%	녹색상품을 구매하기위해 기꺼이 비용을 더 지불함
Sprout	26%	환경과 녹색운동에 관심은 있으나 완전히 실천으로 옮기지 못함
Grouser	24%	환경 친화적 행동을 하지 않고 변명을 많이 하며 다른 이들을 탓함
Basic Browns	28%	행동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그룹보다 교육이 덜 됨

〈영국녹색소비자들, 국가 소비자 위원회〉

Affluent Greens	19%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무연휘발유, 재활용 상품, 유기농산물을 산다
Young Greens	17%	위와 유사하나 학생이나, 주로 직장이 없는 1만 파운드 이하의 수입의 사람들(윤리적 소비는 반드시 부유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
Recylers and Careful Spenders	38%	환경 친화적 행동을 하지만 녹색상품을 구매하지는 않음
Sceptics	26%	확신이 없음

2) 사회 경제적 측면

윤리적 소비의 동기나 인식정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소비자의 특성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대부분 여성, 공공분야나 복지 관련 직업, 30세 이상(레귤러 공정 무역상품 구매자), 50세 이하, Guardian독자, 백인 영국인, 기혼, 노동당 지지, 성인교육 받고 있음(옥스팜 캠페인, 1995) 등이며 한 조사에서는 여성들이 윤리적 이슈를 고려한다고 했다. 유로바로미터 연구는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식한 대로 행동으로 옮겨 실제로 공정 무역상품을 구매하는 비율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 의식과 행동 사이의 차이

실제 윤리적 소비행동과 관심의 차이가 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친환경적인 상품은 가격, 성능, 품질, 손쉽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소비자 기준에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 상품이 환경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정보가 부족하다.
- 담겨진 정보가 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 시장에 친환경 상품이 충분하지 못하다.
-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얕다.
- 환경 친화적 상품을 찾아다닐 만한 시간이 없다.
- 환경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지불하려는 성향이 별로 없다.

의식과 행동사이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는 주장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잘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이 있게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탐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윤리적 소비자들은 의사

결정을 하고 효과적인 습관이 되게 하는데 다양한 관심사를 표명(예: 채식주의, 재활용)하며, 하나의 이슈를 행동으로 옮길 때 다른 문제들도 의식하고, 행동을 결정할 때 그 문제도 포함시켜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윤리적 구매를 결정하는 다양한 상황을 포착하였는데 윤리적 선택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 같은 노고가 필요하다. 또한 윤리적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책임감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므로 양심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대안상품 직판장보다는 슈퍼마켓에서 공정무역상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슈퍼에서 그런 상품을 갖추어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라고 답했다.

4) 윤리적 소비에 대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함

윤리적 특색을 갖는 상품들은 경쟁상품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편이다. 윤리적 상품의 프리미엄은 생산자들에게 가격을 보장해 주거나, 생산 공동체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일정부분 몫을 챙겨줄 수도 있으면 또는 더 높은 생산비용 때문이거나 인증비용에 기인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정도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데, 틈새시장이 아닌 주류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윤리적 소비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정무역 상품의 가격이 생산자에 대한 윤리적 관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저소득층은 부유한 사람들보다 전체 지출에서 윤리적 구매 비율이 더 높기도 하다. 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요인 두 가지가 더 있다. 생산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상품의 시장특성이 그것이다. 시장의 특성에서는 어떤 상품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사치 상품으로 간주되는지의 문제가 중요하다.

5) 정보의 출처

윤리적 소비자들은 상품의 윤리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출처를 통해 얻는다. NGO운동, 상품의 라벨, 공정무역상품/대안상품 특약점, 일반 소매점, 미디어, 가족과 친구 등이다. 그런데 다양한 출처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보고는 별로 없다.

4. 결론

1) 미래의 연구를 위한 암시

무역과 소비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런 인식과 관심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다.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식수준, 소비자에게 그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의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좀 더 실질적인 수준에서는 소비자가 윤리적 상품을 접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에 대해 알아내야 할 게 많다.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언제 : 2010. 10. 24(화) 어디서 : 성공회대학교 승연관 세미나실
 누가 : 김미영 (구로생협), 송정임 (인천생협), 우분주 (운소맘 블로거)
 사회·정리 : 김아영 (생협평론 편집위원)

2) 정책 실행

윤리적 소비운동은 윤리적 소비를 ‘쉽게’ 만들어 주어야 성장 가능성이 있다. 영국에서 무연휘발유를 사용하도록 한 것처럼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윤리적 소비의 실천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들이 이용, 신뢰하며 설득력 있는 정보자원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투자한다.
- 다양한 사회조건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좀 더 윤리적이 될 수 있게,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일할 때 사업체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 훌륭한 실천을 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한다.
- 사회적, 환경적 보고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려는 목적만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다른 윤리적 가치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상품의 질, 가격 등). 구매 이유 또한 생산자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의지만큼이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구매하는 이유도 크다. 어려운 상황의 생산자들과 소자작농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해당 상품의 시장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생산자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무역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직체가 어떤 가치를 목표로 삼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

- 효과적인 사업개발과 관리시스템
- 목표하는 시장에 알맞은 품질을 갖춘 상품
- 최소한의 경제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또한 인증비용의 문제와 함께, 규모가 크고 자원이 갖추어진 생산자들에게만 윤리적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여 공급의 집중화로 이어지는 위험을 배제해야 하며, 생산의 ‘선한’ 기준은 유지되고 무역은 공정하게 실행되며, 또한 소규모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윤리적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기업만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소비자를 설득하게 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멀리 떨어진 지역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더욱 더 주변화 시킬 수 있는 윤리적 소비 운동은 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 : 안녕하세요? 이번에 창간하는 생협평론은 ‘윤리적 소비’를 주제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좌담회도 같은 맥락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론적 정의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생협 활동이나 블로거 활동, 교육 활동을 통해 모두 직·간접적으로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윤리적 소비가 시작되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미영 : 2001년부터 구로생협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자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보장한다는 슬로건이 마음에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조합원인 나의 소비에서 농민들의 생활비가 보장된다는 사실에 만족을 느꼈는데, 지금에서야 이런 활동이 윤리적 소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 윤리적 소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생협 조합원 활동을 하는 저에게 윤리적 소비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송정임 : 아이가 크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이 먹을거리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생협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iCOOP생협 전문활동가로 윤리적 소비 부분에 대한 활동을 8개월 정도 했는데, 솔직히 윤리적 소비에 대해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07년 생협축제에 참여해서 ‘윤리적 소비’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생협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윤리적 소비 역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미로만 본다면 윤리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무언가 착해야 할 것 같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제 윤리적 소비는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분주 : 지금 7살 난 아이가 있는데, 2004년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친환경 먹을거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생협 조합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릴 때부터 아이의 식습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협 조합원이 됐을 때, 아이가 친구들과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게 불편해서 아이를 위한 간식을 준비해 주워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는데요. 그 후부터 다른 아이 부모들과 함께 간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서로 친해지면서 생협에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혼자만 만족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도 함께 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 윤리적 소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김미영 :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생협에 가입했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자신의 역할을 '소비자'로만 한정 짓는 것 같아 불만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윤리적 소비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소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윤리적 소비는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리적 소비라는 표현을 듣고 난 후부터 나름대로 의미를 살리는 실천을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군요. 윤리적 소비가 착한 소비, 책임 소비 등 의미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혹은 활동 속에서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윤리적 소비 활동은 무엇인가요?

김미영 : 기본적으로 생협 물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윤리적 소비 활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소비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실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눔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 아동센터를 후원하거나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하는 것도 윤리적 소비 활동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송정임 (인천생협 / iCOOP생협 전문활동가 1기)

송정임 : 내가 소비하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연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실천이 필요한 거죠. 종이컵은 분리수거 이후 코팅지를 벗겨내야 진짜 재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컵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버려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컵을 30번 씻어 쓰면 나무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동안 편리하고 쉽게 썼던 것들을 안 쓰거나 조금만 쓰려고 노력하는 것도

윤리적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분주 : 저는 윤소맘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37명의 윤소맘 블로거들이 네이버, 다음 등에서 활동 중이고 저는 주로 생협 물품으로 요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활동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군포생협에서 지역의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베품시장을 열었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원생협 홈페이지의 아나바다 코너를 보면 한 사람이 물품을 받아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품을 재가증하는 릴레이식 아나바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윤리적 소비를 이끌어 내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아영 (사회 / 편집위원)

사회 :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모두 iCOOP생협과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윤리적 소비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iCOOP생협은 적극적으로 물품, 정책, 조합원 활동 등에서 윤리적 소비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iCOOP생협의 '윤리적 소비' 관련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김미영 : iCOOP생협이 윤리적 소비 관련 활동으로 전 국민적인 소비자운동을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즉 생협 물품을 구입하면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더 논의를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iCOOP생협이 예전에 '우리 밭을 살리고 우리 쌀을 살리자'라는 주제로 전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으려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윤리적 소비 관련 활동 역시 온 국민이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대 사회적 운동 차원으로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임 : 현재 iCOOP생협이 공정무역 산지인 필리핀에 설탕 공장을 짓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활동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 소비는 생산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활동들이 윤리적 소비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공지하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iCOOP생협이 운동 차원으로 모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모금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온라인보다 매장을 통한 조합원 가입이 높아지고 있는데, 매장 공간을 더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분주 : 지금 지역 조합에서 식품안전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iCOOP 생협 조합원이지만 윤리적 소비에 대해 잘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도 많

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통해 윤리적 소비에 대해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임 : iCOOP 생협이 공급차량에 윤리적 소비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부착한 이후 과속 운전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연드림 매장에서도 윤리적 소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 질 때가 있습니다. 자연드림 매장은 다른 일반 판매 매장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매장 직원들은 물품에 대해서뿐 아니라 조합비, 출자, 지역 조합 사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고객에게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의 강도가 더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사람이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영 : 저도 윤리적 소비는 윤리적 생산, 윤리적 경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속한 지역조합 역시 매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의 문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 : ‘윤리적 소비’를 통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iCOOP생협뿐 아니라 윤리적 소비를 이야기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iCOOP생협이 좀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영 : iCOOP생협의 윤리적 소비는 믿을 수 있다는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COOP생협의 물품에 대한 신뢰, 운영에 대한 신뢰, 활동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리적 소비는 교육과 환경, 삶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임 : 저소득자도 iCOOP생협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협의 문턱을 낮추는 고민을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점점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가는데, 물품 공급뿐 아니라 금융이나 교육 등 생활에 보탬이 되는 다른 사업도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분주 (군포생협 / 윤소담 블로거)

우분주 : 제 주변에는 생협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과 모인 자리에서 유기농 먹을거리만 찾는 조금 까다로운 사람으로 인식될 때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처럼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일수록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에 대해 더 많이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iCOOP생협의 성장은 그만큼 책임을 수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윤리적이여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iCOOP생협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윤리적 소비를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윤리적 소비의 실천 활동부터 iCOOP생협의 활동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각자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좌담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김미영 (구로생협/사무국장)

송정임 : 자기가 선택한 소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윤리적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소비가 정직한 생산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소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물품을 사더라도 결국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는 다 버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버려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물품을 사용하는 게 윤리적 소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 윤리적 소비는 세상을 바꾸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부엌에서, 주변에서, 생활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소비는 의식적인 소비입니다. 즉 물건이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iCOOP생협 조합원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물품을 이용하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소비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분주 : 윤리적 소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실천에서 그치지 않고 친척과 이웃들에게 모두 알리고 함께 실천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쌀쌀해진 날씨인데도 참석해주시고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우리의 윤리적 소비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iCOOP

이슈기획

이슈기획

웅포금강에서 사라진 이름들	송기억 (르보작가)	44
투기자본이 판치는 세상, 공정무역은 위태롭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51

웅포금강에서 사라진 이름들

송기혁 (르보작가)

2010년 11월 7일, 금강의 전북 구간인 익산시 웅포면으로 향했다. 우연히 소식을 들은 전북 지역 대안 언론인 <참소리>의 경은아 기자가 소식을 듣고 동행했다. 우리는 익산시 웅포면 대봉암리에 있는 엄남섭 씨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

금강을 옆에 두고 너른 들녘과 아름다운 마을들이 터를 잡은 웅포면은 몇 년 전 한 차례 홍역을 앓았다. 홍역은 한 번 걸리면 다시 발병하지 않지만 개발의 홍역은 되풀이되고 있다. 그때의 홍역은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골프장 건설이었다.

익산시는 골프장과 함께 골프학교가 들어선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골프학교가 들어서면 웅포면이 대학가가 되고 상권이 생긴다고 했다. 골프학교엔 돈 많은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식당도 잘 되고 가게를 열면 돈을 벌 거라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골프장은 들어섰지만 골프학교는 생기지 않았다. 감언이설과 협박 끝에 익산시는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건설업자에게 헐값으로 넘겼다. 엄남섭 씨가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 겪은 일을 들려준다.

“내가 면장하고 식당에서 한 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러더라고. 웅포면은 골프장 들어오면 안 좋아 이거야. 근데 익산시에서는 골프장이 꼭 들어와야 한다고. 세금 수입이 들어오니깐. 웅포면 입장에서는 별 이득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사실은 뒷사람을 제외하곤 별 혜택이 없을 겁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결국 주민들은 빈 깡통만 차게 된 거지.”

익산시의 홍보에 속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땅을 지키려는 주민들 사이에 극심한 내분이 있었다.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에 맞서 싸웠지만 익산시는 이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개발 허가를 내는 편법으로 건설을 밀어붙였다.

2006년 건설된 웅포 골프장은 서울에서도 찾아오는 VIP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골프장이다. 이들이 웅포면에서 소비를 하고 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농지를 잃은 주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골프장에서 경비를 서거나 잡부로 취직해 잔디를 때우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엄남섭 씨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농촌진흥공사에서 양수장 소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농촌진흥공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고향 마을인 대봉암리에 돌아와 5년째 살고 있다. 그가 자신이 근무했던 농촌진흥공사에 맞서 싸우게 된 것은 몇 주 전의 일이다.

마을 논으로 덤프트럭이 오기 시작했다. 금강에서 오는 준설토를 실은 차였다. 그는 논으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서 맨 몸으로 덤프트럭을 막아섰다.

“처음 농지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약속은 흙을 좋은 놈만 쌓아준다고 했어. 언제든지 맘에 안 들면 돌려보내도 된다고. 모래 넣는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경작자에게 양해도 없이 모래 가지고 오더라고. 처음에는 좋은 흙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중간에다가 모래를 쌓을라고 해. 한 번 잘못해놓으면 논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하겠다 그랬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농지 위에 모래를 먼저 쌓고 그 위에 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흙을 쌓은 후 모래를 가져온 것이다. 그가 트럭을 막자 뒤따라오던 덤프트럭 스무 대 가량이 멈춰 섰다. 운전기사들이 그를 들어 길에서 밀어냈다. 그는 외쳤다.

“절대 못 들어가. 니들이 더 할려고 하면 길을 봉쇄시키겠다.”

농촌진흥공사 직원들과 건설회사 직원들이 찾아왔다.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직원들을 보자기가 막혔다. 평생 근무하면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업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직원들이 간곡하게 사정을 했다. 그날 가지고 온 모래만이라도 붓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관계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여. 신고 돌아가. 절대로 못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우려한 공사 관계자들이 돌아갔고 차량도 방향을 돌렸다. 그후 보름 동안 준설토를 실은 덤프트럭이 오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대부분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임대농이었다.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마을엔 노인들이 많아 싸울 힘이 없었다. 농촌진흥공사에 가서 시위를 벌이려 해도 함께할 사람이 적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농촌의 현실을 깨달았다.

“농촌은 그것이 문제드만. 싸울라고 하면 사람이 없어. 일흔, 여든 먹은 사람들이 먼 심이 있어? 임대로 짓는 사람들은 ‘내 논도 아닌데 뭐’라고 뒷집여. 대화를 해볼라니까 얘기할 사람이 나보다 더



웅포면 엄남섭씨 “농촌에선 싸울라고 해도 사람이 없어. 일흔, 여든 먹은 사람들이 먼 심이 있어...”

나이 먹은 세 사람밖에 없어. 정부에서 몇 사람만 해결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4대강 주변의 마을들을 다니며 깨달은 것도 그것이었다. 4대강 사업이 정부의 의도대로 일사천리로, 전광석화로 진행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농민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었다. 지난 몇십 년 간의 이농으로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었다. 시골마을들은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없는 반토막난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지난 해 봄 시골 어느 마을을 찾아갔을 때는 마을 청년회 회장이 나를 맞이했다. 청년회장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나는 정말 청년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악수를 내민 청년은 예순 살이 훨씬 넘는 노인이었다.

노령화 된 마을 주민들은 한 마디로 ‘만만한’ 상대였다. 게다가 집성촌이 대부분인 농촌 마을들은 긴밀한 유대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유지 몇 명만 매수하면 땅을 수용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설령 마을 주민들이 톨톨 뭉쳐 결사반대하며 싸운다 해도 노인들은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었다.

농민들이 자신들의 삶터와 생존권을 송두리째 잃어도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깨달은 농촌의 현실 때문이다. 4대강 전역에서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든 곳이 팔당 지역 농민들을 비롯해 몇 마을 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엄남섭 씨도 결국 ‘좋은 흙’으로 1미터를 복토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마을 논은 10년 전 경지정리를 했다고 한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애써 경지정리된 논을 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활용해 땅을 메우고 논을 새로 만드는 일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지를 하천보다 높게 해 저습지의 침수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침수 걱정이 없는 지역에서도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강바닥의 퇴적토 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을 조사했다고 발뺌하다 결국 시인한 적이 있다. 다른 부분의 환경영향평가에서처럼 짧은 기간 줄속으로 조사한 것이다. 낙동강에서는 수십여 년 강바닥에 묻혀 있던 중금속으로 오염된 오폐수를 농지 리모델링 현장에 부었다. 전국에 걸쳐 강바닥의 알 수 없는 오염원들이 비옥한 농지에 쌓이고 있다. 강에서 가져온 퇴적토들은 결국 먹을거리를 위협하고 있다.

농수로와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4대강 못지않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전광석화 같이 진행되고 있다. 끝없이 퍼붓는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토건업자들은 배를 불리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시골 마을을 지나는 도로가 파손되고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무시되고 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2년치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다. 내가 만난 농민들은 땅이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면 2년 후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금강옆 하천부지 수용으로 농민들은 농지를 잃다
© 참소리

금강에 인접한 인근 마을의 많은 농민들은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농사에서 손을 떼고 있고, 금강 옆의 하천부지 수용으로 농지를 잃고 농사에서 손을 떼고 있다. 하천부지의 농민들 대부분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삶터를 잃었다. 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는 결성되지 않았다. 농지 보상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엄남섭 씨가 정부의 하천부지 수용의 문제를 설명한다.

“국유지에 농사를 지으면 정부에서 가져갈 때 영농손실보상, 개간 손실보상비를 받아. 그런데 옛날에는 다 무허가로 개간을 했어. 다 쌀이 없고 식량이 부족할 때니까. 정부에서도 개간하는 거 말리지 않고 오히려 지원했지. 그 후로 농민들에게 사용료를 받았어. 그런데 지금 농민들에게 근거가 되는 입증 서류를 떼어오라고 해. 그것을 어떻게 농민이 내냐? 그것은 행정이 할 책임이지. 몇십 년 지난 것을 어디서 떼어오겠어? 행정기관에도 절대 없어요. 다 소각했지. 보존년도 지난 것은 다 태우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정당하게 사용료를 냈으면 사용한 것으로 봐야잖아. 그런데 서류 떼오라니까 농민들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전국적으로 개발보상비를 하나도 안 줬어. 그러고 영농손실보상이라고 해서 2년치를 줘. 실업급여랑 똑같아. 개간보상비를 주는 게 맞아. 거기서 세금 받아서 국가가 썼잖아. 불법이면 정부에서 애초에 원상복귀시켰어야지 사용료를 왜 받아?”

농민들은 2년치 영농손실보상금을 받고 농지를 잃었다. 사유지를 가진 농민들도 쫓겨나긴 마찬가지다. 경작지를 잃은 마을 주민을 만나고 싶었다. 엄남섭 씨가 이 마을에 사는 엄기순 씨를 소개한다. 연락을 받은 엄기순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왔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않는다.

“웅포대교 밑에 수십만 평이 다 몰수됐잖아. 다 끝났어요.”

엄기순 씨는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선생님이 대책을 세워줄 만한 입장도 아니고. 우리 요구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고초를 선생님이 해결할 대안이 있으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해서 뭐해?”

나는 솔직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다고 대답했다.

“여론 수집하는 거잖아. 이미 몰수돼서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일러준 한 농민의 이야기가 충격적이다.

“최근에 성당면에서 벌어진 일이야. 수확을 며칠 앞두고 있는 하천부지를 밤에 몰래 와서 불도저로 싹 밀어버렸어. 싹 헤쳐부렸어. 농사짓지 말라고 했는데, 2년치 영농손실보상도 받았는데 왜 지었냐면서. 자기가 짓던 땅이고 사업도 안 하고 놓고 있으니까 뭘 심었단 말이야. 정부에선 그동안 내비 뒀 버렸어. 없앨려면 처음에 없애야지.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했다고 껄씸하다고 그런 것이지. 아무리 국가시책이고 해도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멍한 기분이 들었다. 땅은 이미 국가 소유가 되었을지라도 그 땅에서 자란 곡식은 한 해 동안 농민의 피와 땀이 서린 사유재산이 아닌가? 농민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낮이 아닌 한밤중에 몰래 수확을 앞둔 농토를 갈아엎은 물범치가 믿기지 않았다.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엄기순 씨는 고충을 처리해줄 수 없는 사람과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황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다. 동석한 기자가 충격을 받았는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나에겐 익숙한 일이었다. 농민들은 실제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다급한 그네들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일은 어려웠다. 엄남섭 씨가 위로하듯 말한다.

“이재오 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들 몇십 명 데리고 와도 해결 못한 것을 작가가 어떻게 해결해? 저런 식으로 하면 민주화도 안 되야. 이뤄질 줄 알고 데모하나? 안 이뤄질 줄 알면서도 맞아 가면서도 내 주장을 해야지. 때린다고 포기해볼면 영원히 주권을 못 찾아. 지금은 못 찾지만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 손자 때라도 억울한 거시기 안 당할 수도 있고. 다 끝났으니까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세상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

나는 엄기순 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4대강 전역에서 농지를 잃는 농민들 대부분이 그와 같은 분노와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은 삶터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4대강 사업이 인간의 심성마저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사 현장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밖을 나섰다. 엄남섭 씨의 차를 타고 성당면의 들녘을 지나 제방 쪽으로 향한다. 좁은 농로를 한창 달려 제방 앞에 도착했다. 공사현장에 들어가기려 하는데 ‘접근 금지’ 표지판이 앞을 가로막는다. 엄남섭 씨가 우리 앞에 펼쳐진 너른 하천부지를 보면서 말한다.

“여기는 심어논 논 밀어버렸어. 전에 전주MBC에서 왔더라고, 내가 대놓고 그랬어. 당신 이거 백 번 찍어가 봐야 기사 못 낸다. 당신 시청 들어가지? 시청에서 보도국에 전화하면 안 내보내야. 이거 내 보내고 싶어도 짤려. 나오가니? 안 나와.”

방송국 기자는 그럴 리 없다며 꼭 방송에 내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날 취재한 내용은 방송에 보도되지 않았다. 지역 정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부분의 다른 지역의 언론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쉽게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옹포대교로 이동했다. 입구에서 내려 다리를 향해 걷는다. 공사 현장의 모습은 다른 강과 다르지 않다.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본다. 하천 옆 농지는 파헤쳐져 있고 강 한가운데에선 가물막이를 하고 물을 퍼내고 있다. 수십여대의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오간다. 내가 보았던 옹포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왔던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엄남섭 씨가 철새도래지인 이곳에서 오리들이 사라진 것이 금강하구 독이 생긴 후부터였다고 일러준다.

“옛날엔 오리들이 뼉뼉거리는 소리가 집에서도 들렸어.”

그의 집은 옹포 강변에서 2km 거리에 있다. 그 먼 거리에서도 오리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단다. 금강하구 독은 그 소리를 거두어갔다. 먹이도 없고 쉴 곳도 없는 옹포에서 오리들은 죽거나 서서히 발길을 돌렸다. 하구 독이 없을 때 밀물과 썰물이 오가며 생긴 뺨발은 서서히 마르고 사라졌다.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철새들은 숫자가 줄어들었다.

군산 하구독이 생기면서 오리들만 사라진 게 아니다. 갈대밭도 사라지고, 그 많던 기러기도 만날 수 없게 됐고, 하천 갈밭에 사는 주먹만한 그 많던 갈게도 뺨발에 살던 생명들도 사라졌다. 그 시절엔 갈게를 잡기 위해 충청남도 강경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경운기에 가득 갈게를 싣고 떠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때는 갈대밭 속에 게가 그렇게 많았어. 잡으면 다 들고 나오던 못하니까. 물이 들락날락 안 하니까 갈대도 다 죽어버린 거여.”

지금은 갈대도 갈게도 찾을 수 없다. 전멸한 것이다. 군산 하구 독은 금강을 커다란 호수로 바꾸어놓았다. 엄남섭 씨는 군산하구 독을 통해 바닷물이 드나들어야 철새도 오고 미생물도 산다고 말한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금강에 여러 개의 보를 세워 강의 흐름을 막고 있다.

“강이 지금처럼 호수화가 되면 첫째로 물이 썩고 서식하는 동식물이 싹 없어져. 물이 있는 데하고 육지하고 구분돼버리거든. 벌이 없어져버리잖아. 물고기도 벌이 있어야 근처에다 산란을 하는데. 갯벌이 있어야 철새들도 낮에 거기서 쉬고 밤에 먹이활동을 하는데 쉼 디가 있어야지. 호수가 되면 싹 죽어버려요. 하구독 생긴 뒤로 멸종된 물고기 종류가 내가 알기로도 대여섯 가지 이상이 돼요. 붕어랑 메기도 무지하게 줄어볼터만. 잉어는 많이 생기더라고. 게와 갯지렁이, 재첩, 짬뽕어, 뱀장어는 싹 없어져버려. 참게 종류 없어진 것이 무지하게 많아. 갯벌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여.”

그는 4대강 사업의 허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투기자본이 판치는 세상, 공정무역을 위태롭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무역은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서로 다른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무역(貿易)의 한자의 의미는 ‘무역할’ ‘무’와 ‘바꿀’ ‘역’이다. 무역은 교환을 의미한다. 나라사이의 교환을 국제무역이라 한다. 인류역사는 무역을 통해 발전해 왔다. 초기의 물물교환에서 시작해 화폐를 매개로 교환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돈을 사고파는 금융거래까지 일반화되었다. 내가 필요로 하지만 만들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들이고, 내가 쓰고 남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경제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런 무역거래 과정에는 언제나 불공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시장에서 물건과 물건을 주고받는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임금을 거래하는 자본주의사회의 핵심인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까지 확대하면 공정성문제는 인류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원시공산사회를 제외하고 공정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고전과 경제이론은 무역이란 자유경쟁시장에 맡겨두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공정하게 거래되고 균형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보이는 주먹(visible fist)’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냉혹하다. 한마디로 무역의 역사는 불공정무역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전 지구적 화두인 국제무역기구 도하개발 아젠다(WTO DDA)협상도 공정한 무역 질서를 만들어보자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 도하개발 아젠다는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와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출범을 합의하고, 1999년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그러나 이 협상은 당초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각국은 다자간 협상과 동시에 양자 간 또는 지역 간 협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미FTA 협상을 보면 한국과 미국, 노동과 자본, 국가권력과 노동시민사회, 농산물과 비농산물, 개발과 환경 사이에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이 벌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G20 정상회의를 보더라도 ‘공정함’은 찾기가 어렵다.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통제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시작한 G20은 지난 6월 토론토 4차 회의에서 금융개혁에 대해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한 뒤 제5차 서울 회의에서는 금융개혁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무역과 환율논쟁으로 일관하다 끝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엉터리 같은 G20 회의를 개최한다고 온통 난리법석을 떨었다. 후진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192개 유엔가입국 중 고작 선출된 20개 강대국이 모여 세계경제 질서를 결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패권적이다. 그리고 경호법을 동원해 노동자시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한 가운데 열리는 정상들의 잔치는 폭

“어제 서울 가면서 옆에 탄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4대강을 살린다고 하는데 왜 강을 건드냐, 이 얘기에. 샛강을 살리면 4대강은 그냥 살아나. 대전은 시내 한가운데 갑천이 딱 허니 흘러서 금강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논산은 논산천으로 해서 금강으로 떨어지고. 그 폐수가 금강으로 떨어지는 거야. 소하천을 잘 정비하면 금강은 그냥 살아나. 생활 폐수, 공장 폐수, 축산 폐수가 흘러 들어오는데 원인 제공하는 것은 놔두고 강만 파서 뭘 살려? 그 돈 가지고 샛강 먼저 살려놓으면 4대강 안 해도 자연적으로 강이 살아나. 시화호도 그냥 터놓으니까 자연적으로 살아나잖아.”

엄남섭 씨는 군산하구 독으로 인해 금강이 강이 아니라 거대한 호수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농촌진흥공사에 있을 때 시화호 방조제 건설이 성공했다며 직원들과 함께 관광지화 된 시화호를 견학한 적이 있다. 시화호는 독을 건설한 이후 해수유통이 단절되어 물이 썩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시화호 물길을 열었고 물은 다시 살아났다.

엄남섭 씨와 헤어져 익산역으로 가고 있다. 전북 지역 금강의 비극은 일제 시대에 수탈의 기지였던 군산항과 군산하구 독으로 상징된다. 전자는 이 지역 민중들의 수난이었고, 후자는 강의 수난이었다. 마지막 비극이 될지도 모르는 4대강 사업은 강과 민중들의 수난을 동반하고 있다. 문명의 발전이란 민중의 수난과 못 생명의 홀로코스트를 동반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난다. 엄마 어릴 적엔 하늘에 별이 눈부시게 많았다고. 별들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늘도 하늘색이 아니라 쪽빛이었다고 말씀하셨다. 별들이 왜 줄어들었을까? 누가 가져간 것일까? 어머니가 본 쪽빛으로 시린 하늘을 볼 수 없는 땅, 하늘에 나는 살고 있다. ‘엄마의 하늘’을 혼자서 상상하는 밤이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의 하늘은 흐렸고, 별 하나 떠 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 앉아 글을 쓴다. 아득한 거리에서 오리들의 꺽꺽거리는 소리가 전설처럼 들려온다. 



남한강 이포보 ©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 대책위

력적이기까지 하다.

지금 각국 정부들은 무역의 공정이나 불공정문제는 따지지 않은 채 오직 무역거래확대를 통한 성장논리에 빠져 있다. 노동자 탄압과 착취, 가난한 나라에 대한 수탈, 환경파괴, 빈부 격차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김대중 정부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 들어 동북아 금융허브국가와 전 방위적 한미 FTA 추진으로 극에 달했다. 그들은 열광적으로 FTA를 추진했다. 2006년 1월 노무현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FTA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천명했고, 곧이어 2월 3일 한국의 통상 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한미FTA 개시를 선언했다.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고, 2년 후인 2009년 4월 22일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산하연구기관을 내세워 한미FTA를 추진하면 국내총생산(GDP) 7.75%, 대미수출 12.1%, 고용은 3.3% 증가한다고 선전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임기 말기에 한미FTA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당시 정책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교수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미FTA는 ‘신기루’였다고 실토했다.

G20, 공정무역 문제에 무심, 무역거래 확대에만 관심

그러나 한 번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지난 정권보다 더 친재벌, 친 자본 정권에게 칼자루가 쥐어진 상황에서 이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G20 정상회의 경제효과를 무역협회는 31조 2천억 원, 삼성경제연구소는 24조 5천억 원까지 부풀렸다. 전혀 근거 없는 정치선동이지만 설령 그런 효과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지는 명약관화하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불공정거래이며 불공정게임이기 때문이다. 만약 2007년 4월 한미FTA가 타결된 직후 국회에서 비준되고 시행되었다면, 미국 발 금융경제위기로 한국은 제2의 IMF 사태를 맞았을 것이다. 물론 고통은 당연히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다.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협정(NAFTA)으로 미국의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3국 노동자들의 삶은 더 악화되었다. 미국 인권감시센터(Human Rights Watch)나 경제정책연구소(EPI) 분석에 따르면 협정 체결 후 3개 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1999년 멕시코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3%가 30년 전 생활수준보다 못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들은 수당을 인하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소화 했다. 2000년도 임금은 1980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노동조합을 파괴했고, 연금을 빼앗았으며 사업장의 위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현재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정부 발표 5%보다 훨씬 더 높은 18%에 달한다. 그것도 최소치다. 대기하며 시간당 일하는 노동자(Just in Time Workers)를 포함하면 28%에 달한다.

자본은 노동자 계급을 계층으로 분리하고 사다리를 통해 상승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소수를 제외하면 그림의 떡인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다. 미국 대기업들은 1년에 28억 달러에 달하는 로비자금을 쓴다. 조그만 도시에 로비스트 수만 명이 몰려들면서 워싱턴의 인구는 수백만으로 늘어났다. 교육 분야에 1190개, 제약·의료분야에 630개를 포함하여 보험, 전기, 컴퓨터·인터넷, 병원·요양소, 비즈니스 협회, 증권·투자, 석유·가스, 부동산 등 5000여개 기업과 기관들이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다. 이 비용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대기업들은 노조파괴와 함께 저임금 노동자 사용, 제조업 일자리 제 3세계 수출, 일자리 아웃소싱, 최저임금 억제를 위해 워싱턴에서 노동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

이 투쟁에서 패배한 미국 노동자들은 시간당 1달러 정도를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미국 노동자의 것이어야 할 2500억(약 300조 원) 달러가 해마다 자본가에게 이전된다는 의미다. 자본이 노동자 임금 1달러를 12배 이득으로 자본화한다고 할 때 약 3조 달러의 이득을 취하게 된다. NAFTA 시행 이후 15년 동안 미국, 캐나다, 멕시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다. 역내 무역거래가 증가했지만 이는 다국적기업이 투자한 3국간 내부 물류흐름의 증가일 뿐이었다. 오히려 노동자민중에 대한 초과착취와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지난 6월 말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8/G20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에 대해 폭력진압이 자행되었고 경호비용으로 1조원 이상이 들었을 정도다. 가난한 멕시코 노동자들은 여전히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불법이주하고 있고, 멕시코 전역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연일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NAFTA는 국가 간, 기업 간 자유무역 전쟁을 넘어 노동과 자본의 계급전쟁(class war)임이 드러났다. 불공정무역은 국가 간에도 존재하지만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오늘날 무역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결과인 수출과 수입을 통계로 발표만 할 뿐이다. 무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이 늘어난다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소비도 늘어난다. 따라서 사회적 부(富)가 늘어난다는 것이 고전파 주류경제학의 무역논리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이 세계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오늘날 그런 논리는 강단학파들의 낭만에 불과하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특징은 세계주식회사와 금융의 세계화다. 기업(매출액)과 국가(GDP)를 막론하고 세계 100대 경제주체 중 51개가 다국적 기업이다. 엑스모빌 같은 석유회사는 가난한 나라 120개국과 맞먹는 매출액을 자랑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공정무역을 말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세계 6대 다국적 기업(각각)의 연간 매출액을 능가하는 국내총생산(GDP)규모를 가진 나라는 오직 21개뿐이다. 전 세계자산의 20%를 100대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공룡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서로 경쟁한다. 지난 30년간 상위 20대 다국적 기업 중 6

개만이 살아남았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다. 오늘날 무역거래는 포장만 국가 간 무역일 뿐 내용은 대부분 다국적기업 간 내부거래다.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에 생산기지를 두고 생산하고 판매한다.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 회사 GM이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 완성차를 만들어 이를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보자. 한국은 부품을 미국에 수출(미국은 수입)하고 미국은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한국은 수입)한다. 형식적으로 양국의 무역규모는 늘어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다국적 기업 GM의 기업 간 거래일뿐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임금을 삭감하면서 다국적 기업 GM은 이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것이 불공정 무역의 핵심이다.

투기자본은 단기간에 이익을 빼먹고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혁신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매달린다

IMF외환위기 이후 외자 유치만이 살길이라고 외쳤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IMF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했고,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부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업은 인수합병 되었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났다. 금융은 선진금융기법도입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외국투기자본에게 불법적으로 헐값에 팔려나갔다. 공공부문은 민영화(사유화, 사기업화)되거나 역시 외국투기자본에 팔려나갔다. 노동부문은 노동시장유연화의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 당했고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이제 금융투기자본의 수탈과 착취 그리고 ‘먹튀(먹고 튀는)’는 한국사회의 최대화두가 되었다.

투기자본은 불법인수합병, 투자회피, 구조조정, 공적자금 활용, 유상감자, 고배당, 자산매각, 회계부정, 환투기, 세금포탈, 기술유출, 기업청산과 직장폐쇄, 국가권력의 노동탄압 등 불공정 행위를 한다. 구체적으로 투기자본의 행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불법인수합병** : 2003년 외환은행이 대표적인 불법인수다. 투기자본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인인 은행법에 의거, 1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법을 무시하고 주식 51%의 경영권까지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까지 조작했고 여기에 정부관료, 은행경영진, 금융감독원, 법무법인까지 공모했다. 최근 파업 중인 씨앤엠의 경우도 투자금액보다 많은 대출을 통해 인수했다.

● **투자회피** : 상하이 자본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약속한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투기자본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차익을 노린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는 회피할 수밖에 없다.

● **구조조정** : 투기자본은 단기간에 이익을 빼먹고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혁신 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매달린다. 말하자면 팔아먹기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높은 가격을 팔 수 있고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적자금 활용** :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할 테니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IMF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15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적자금 절반 가량은 회수되지 않았다.

● **유상감자** :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에 실패하면 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한다. 특히 경영에 실패한 대주주는 무상감자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다. 그런데 투기자본들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모두 빼먹는다.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감자를 한다.

● **고배당** : 투기자본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먹튀’이므로 최대한 높은 배당을 실시한다. 요즈음은 한 술 더 떠서 주주총회 때 한 번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빼나간다. 주주에 대한 고배당뿐 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나 이사들에게 고액의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회사 돈을 유출시킨다.

● **자산매각** : 투기자본은 고배당, 고연봉, 차익매각뿐 아니라 회사자산을 교묘하게 매각하여 빼돌린다. 대주주라 하더라도 자산을 일방적으로 매각해 빼돌리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런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 **회계부정** : 쌍용자동차 노동자 3000명을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벌어졌다. 최근 재벌들이 벌이는 부정과 부패의 핵심은 가·차명 계좌와 이중장부를 통한 회계조작을 통한 불법이다. 투기자본은 먹고 튀어야(먹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수법을 동원한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들은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포장한다.

● **환투기** : 오늘날 투기자본은 단순히 투자수익인 고배당과 매각차익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한다. 제조업의 경우도 단순히 투자, 생산, 이윤극대화만이 아니라 국내외 환율변동에 따른 제조업의 금융화를 시도한다. 최근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현혹해 키코(KIKO)라는 파생상품을 판매한 것도 일종의 위험회피수단인 ‘환헤지’가 아니라 ‘환투기’를 유도한 측면이 크다.

● **세금포탈** : 1998년 제일은행이 17조 원의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된 뒤 뉴브릿지캐피탈에 팔렸다. 그들이 2005년에 영국계 스탠다드차트 자본에 팔고 나가면서 1조 2000억 원의 매각차익을 남겼지만 세금 한 톨 물지 않았다.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본사가 있는 곳에만 세금을 낸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당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사를 두었지만 이곳은 세금면세

(tax haven)지역이었고 이곳에 종이회사(페이퍼컴퍼니)를 두고 한국에서 실질적인 영업을 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하고 있다. 그들은 이를 절세(節稅)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포탈인 절세(竊稅)를 하고 있는 셈이다.

● **기술유출** :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기술을 헐값에 빼간 것이 상하이자본이다. 자동차 한 대 생산 기술이 3000억 원에 달했는데 200억 원 정도만 내고 가져갔다. 그 외에도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산망을 통한 모든 기술을 이전시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기술을 유출시켰다. 그들은 기술이전이라 우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도 마힌드라를 위한 쌍용차 매각 역시 마힌드라가 삼륜차, 농기계 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유출을 노리고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에서 국가권력이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국가는 세계화된 자본의 하위 파트너다

● **청산** : 다 빼먹고는 공장을 폐쇄하고 도망친다. 일종의 야반도주다. 쌍용자동차의 경우는 법정관리 형식을 빌었지만 발레오 공조 같은 경우는 그냥 공장을 폐쇄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IMF외환위기 직후 구미 오리온 전기 같은 경우도 투기자본이 공장을 청산하고 철수해 수천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린 경우다.

● **국가권력의 노동탄압** : IMF외환위기 직후 한라그룹(만도 등 계열사)이 투기자본에 넘어가고 구조조정을 가하자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했다. 필연적으로 국가공권력이 폭력적으로 개입했다. 최근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은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세계화된 자본의 하위 파트너다. 국가는 자본의 대행기관이다.

공정무역질서 확립과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경제정의와 평등사회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류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부등가, 비대칭거래를 근절하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탈하여 불로소득을 챙기는 금융투기자본을 규제해서 금융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 무질서한 약육강식의 시장 질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통제와 규제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공정한 룰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지구촌 협동조합 소식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	김태연 (iCOOP생협개발부 무역팀장)	60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 : 경제 대안 운동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63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68
돌발논문 / 우리는 속고 있다, 속는 줄도 모르고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 위원장, 천안함언론검증위원)	70
서평 /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이선옥 (구로생협 문화위원, 르보작가)	76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

김태연 (iCOOP생협개발부 무역팀장)

1946년 설립된 미국의 텐 싸우전 빌리지(Ten Thousand Villages)¹에서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의 가난한 이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팔면서 시작된 공정무역은 약 6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생산자와 시민단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 지구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FLO(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09년 27,000개의 FLO 공정무역품이 70여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고, 전 세계 매출 규모도 2009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하여 약 34억 유로(약 5.3조 원) 매출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어떤 국가에서는 소비자의 80% 이상이 FAIRTRADE 마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전 세계 3,000여 개 풀뿌리 조직들과 수 백 만 명이 넘는 소규모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공정무역을 위해 조직화 되어있다. 이제 공정무역 운동은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and 기업의 인식을 고취시키면서 주류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아름다운가게가 인도, 네팔 등 아시아 생산자에게 수공예품들을 받아 판매한 것이 공정무역의 첫 시작이다. 당시 아름다운가게의 수공예품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사업을 접고 2006년 네팔의 공정무역 커피로 공정무역 사업을 재개하였다.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는 저마다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두레생협, 한국YMCA연맹, 페어트레이드코리아, 한국공정무역연합, iCOOP생협 그리고 기아대책기구와 같은 단체들이 공정무역에 차례로 합류하면서 공정무역을 홍보하고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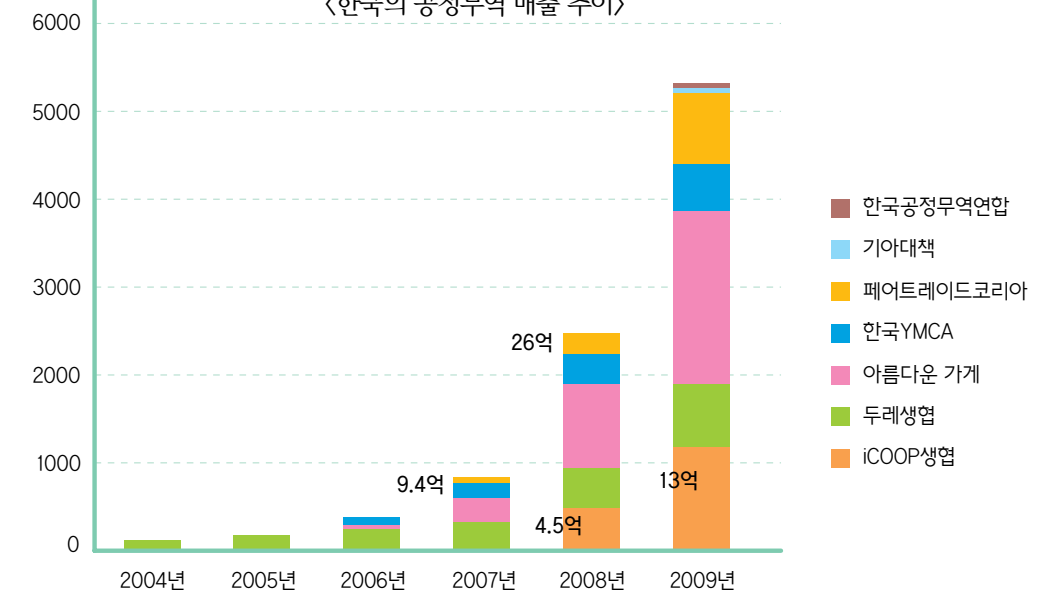
현재 한국의 공정무역 시장규모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약 8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들의 2009년 총매출 54억 원과 유럽, 북미지역 등지에서 수입된 FLO인증 완제품 26.7억 원(FLO International 제공 자료)을 합한 금액이다. 2003년 첫 공정무역 거래 시작 이후 7년에 걸쳐 한국의 공정무역 시장은 매년 2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¹ Ten Thousand Villages 의 1946년 당시 명칭은 SELF-HELP Craft 이었고 이후 1996년에 Ten Thousand Villages 로 변경, 현재 미국 전역에 약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²

단체명	공정무역 품목	공정무역 생산지
iCOOP www.icoop.or.kr	원두커피, 인스턴트커피, 마스코바도, 초콜릿, 올리브유, 후추	동티모르, 콜롬비아, 필리핀, 아르헨티나, 네팔
두레생협 www.dure.or.kr	원두커피, 마스코바도, 올리브유	동티모르 페루, 라오스, 필리핀, 팔레스타인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커피 www.beautifulcoffee.com	원두커피, 초콜릿, 홍차	네팔, 페루
한국YMCA 피스커피 www.peacecoffee.co.kr	원두커피	동티모르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www.fairtradegru.com	의류, 수공예품	인도, 네팔 등 아시아국가
기아대책 행복한 나눔 www.sharinghappiness.or.kr	원두커피	멕시코
한국공정무역연합 www.fairtradekorea.net	FLO 인증 수입완제품, 공정무역 다큐멘터리 제작 및 출판	

〈한국의 공정무역 매출 추이〉



² 공정무역 외에도 '공정여행' 관련 단체 및 회사로 이매진피스(www.imaginepeace.or.kr), 착한여행(www.goodtravel.k), 트래블러스맵(www.travelersmap.co.kr) 등이 있다.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¹ : 경제 대안 운동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1. 들어가면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펴낸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6.7%로 농산물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7% 아래로 내려갔다. 곡물 가운데 쌀과 보리를 제외한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보면 밀 0.5%, 옥수수 1.0%, 콩 8.4% 등으로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2010년 3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노동자 수는 833만 7천명(정부 통계는 549만 8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3.1%²)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9.8%이다. 같은 자료에서 비정규직 비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를 진행하면서 국가가 담당하던 복지가 취약해졌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부터 겨우 시작하려던 사회서비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중단되거나 감소되었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전 국토의 환경 파괴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 3,880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하여, 2009년 354만 3,030명으로 무려 34만 여명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는 778만 9,424(1995년)명에서 1,146만 610명(2009년)으로 무려 367만 1,186명이 늘었다.

1980년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제27차 모스크바 총회에 보고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또는 「레이드로우 보고서」)에서, 레이드로우는 다가오는 2000년에 협동조합이 식량과 기아, 인간다운 일자리,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 지역 사회의 재생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글머리에 나열한 내용은 이 네 가지에 대한 한국의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한국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진행된 세계 곳곳이 모두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인해 1억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기아에 놓였다고 자크 디우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은 발표했다(경향신문 2009년 3월 27일 인터넷판 보도). 2007년까지 8억 5천만명이던 기아 인구가 2008년에는 10억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유럽의 협동조합이 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하거나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iCOOP생협은 2007년 9월 마스코바도 생산지인 필리핀 PFTC(Panay Fair Trade Center) 방문을 첫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iCOOP생협만의 공정무역을 부지런히 만들어가고 있다. iCOOP생협은 한국에서도 후발 공정무역 단체이지만 어느새 커피, 초콜릿, 마스코바도, 올리브유, 후추와 같은 다양한 공정무역 품목을 취급하고 있고,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로는 유일하게 FLO 의 수입자 인증 및 라이선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정무역품과 국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과자, 소스, 차, 아이스크림 등 경쟁력 있는 가격에 다양한 가공물품 개발로 공정무역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공정무역품을 가장 많이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위와 같은 물품 소비 측면의 성과 외에도 공정무역품에 책정되어 있는 공정무역 산지 지원금은 08년, 09년 누적 금액이 약 4,300만 원으로 이 중 3,000만 원은 이미 동티모르 커피 생산지인 로뚜뚜 마을에 전해져, 마을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생계수단인 트럭과 도서관 보수와 도서 구입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2010년 11월 지금, 필리핀 공정무역 단체 PFTC와 2년 전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iCOOP생협의 조합원, 생산자, 임직원들의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약 2억 원의 마스코바도 공장 건립이 외부의 지원 없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들이 현실이 됨을 경험하면서, 협동의 힘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금 깨닫는다. 

1 이 글은 2010년 10월 16일 ‘한국학술단체협의회’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요약한 것이다.

2 정부는 임시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민간연구소들은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2. 신자유주의, 대자본과 경쟁하는 유럽의 협동조합운동

먼저 이 장에서는 유럽의 네 개 나라에서 진행된 여섯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나라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 나라 협동조합의 연차 보고서³를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인터뷰한 자료, 그리고 제공 받은 자료를 정리 하였다.

1) 스위스생협의 물가와 노동자 고용 안정

스위스에는 두 개의 큰 생협이 있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조합원 207만명, 직원 83,780명에 연매출 249억 스위스 프랑(약 29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미그로(Migros)생협'과, 조합원 252만명, 직원 52,974명에 매출 181억 스위스 프랑(약 21조 원) 규모의 스위스생협(Co-op Swiss)이다. 두 생협을 합하면 조합원 459만명, 직원 136,754명, 매출 약 50조 원이다. 이 두 생협 가운데 스위스생협은 2008년에 중요한 일을 두 가지 한다. 하나는 세계 2위 규모의 유통자본인 까르푸 매장 12개를 인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위기 때 생필품 등의 물가를 잡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한 일이다. 스위스생협의 2008년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까르푸를 인수한 후에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켰고 2008년 스위스생협의 물가는 0.9%, 국가 전체의 소비자 물가는 1.2% 상승에 머물렀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해 선진국들 대부분이 물가가 상승하고, 2006년 한국에서 19개의 까르푸 매장이 철수하면서 그 매장을 인수한 홈에버(현재 삼성홈플러스테스코)가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일이다.

2)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의 파산한 노동자 재고용

경제위기에서 지중해 연안 유럽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리스를 비롯하여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다른 서부유럽에 비해 경제가 더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몬드라곤이 속해 있는 스페인은 지중해 연안 유럽 국가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스의 경제위기 다음이 스페인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10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몬드라곤을 방문했을 때 교육을 담당한 협동조합홍보담당 이사 Mikel Lezamiz는 스페인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다.

2009년 스페인 전체에서 약 2.4%의 기업이 파산을 하였는데,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120개의 협동조합 가운데 0.8%인 1개만 파산했다고 한다. 그런데 파산한 노동자협동조합 소속의 노동자 가운데 원하는 사람 모두를 몬드라곤의 다른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재고용했다고 한다. 몬드라곤협동조합에서는 이번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이

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재배치에 동의하는 것은 단위 협동조합이 몬드라곤협동조합에 가입할 때 협약하는 7개의 조건 가운데 하나다. 참고로 몬드라곤협동조합의 2008년 매출은 약 168억 유로(약 30조 원)이고 92,773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3)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주에 있는 볼로냐 시의 협동조합의 경제

이탈리아의 중북부에 있는 볼로냐 시는 에밀리아로마냐 주의 주도(州都)로서 인구가 37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남 진주시(약 35만명)와 비슷한 규모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 가장 가난한 도시였던 볼로냐는, 2010년 현재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전체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풍요로운 도시로 변했다.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비롯한 협동조합이 있다. 2010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볼로냐를 방문했다.

자료에 따르면 볼로냐 시에는 노동자 10명 중 1명이 Lega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 볼로냐에는 각 분야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전통적인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뿐 아니라 주택, 출판저널, 운송, 문화, 와인 심지어 노숙자협동조합도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시장이 아닌 협동조합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협동조합 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볼로냐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Stefano Zamani은 볼로냐에서는 협동조합이 파산한 일이 없다고 한다. 2009년 이탈리아 전체 기업 중 파산한 기업이 2%가 조금 넘는 것에 견주면 대단한 실적이다.

4) 이탈리아생협의 분유값 안정

이탈리아생협연합회는 2004년 12월 생협브랜드 분유 2종류를 출시했는데 이 분유의 가격은 시장 평균가격의 절반인 9유로(900그램)다. 분유를 개발한 이유는 유럽연합의 평균 분유 가격보다 2배나 높은 이탈리아의 분유가격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탈리아의 분유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유는 분유제조업체가 투기자본에 장악되어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운동이 일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분유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이탈리아생협연합회는 독자적인 개발기준을 결정해 국내외생산자와 제조업체를 찾아 분유개발에 나섰다. 상품개발 기준으로는 유럽연합의 분유에 대한 기준, 이탈리아법,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유아영양학회(ESPGAN)기준, 코덱스 기준을 포함해서 정하였으며, 기준에 맞게 제조가 가능한 프랑스의 생산협동조합 Unicopa에 위탁해 개발하였다. 이렇게 이탈리아생협은 프랑스생산자협동조합과 협력하여 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설 수 있었다.

5) 지역 사회를 재생하기 위한 영국협동조합의 노력

1979년 영국 보수당의 마거리트 대처가 집권한 이후 강력하게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인구가 적은 지역을 더욱 피폐하게 했다. 기업은 수익성이 없는 매장은 철수시켰고 정부도 적자를 보는 우체국은 정리했다. 정부와 기업의 이와 같은 정책과 사업 방향으로 해당 지역은 사람이 더욱 살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도시에서 멀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생필품 등

3 아이쿱생협의 국제팀장인 김형미 씨가 영어(스위스, 영국, 스웨덴의 협동조합)나 일어(이탈리아 레가협동조합)로 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 글로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을 구입할 생활 네트워크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 사회 해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커뮤니티숍(매장)과 컨트리마켓(마을장)을 만들고 지역사회 축구팀을 재건하였다. (아래 표 참조)

〈영국에서 새로 생긴 지역 사회 협동 조직 현황〉

분류	조합 수(개)	사업금액(파운드)	조합원기금(파운드)	조합원 수(명)
컨트리마켓(마을장)	65	7백41만	62만	14,065
커뮤니티숍(매장)	174	1천641만	4백29만	19,740
서포터즈 기금	159			125,000
합 계	398	2천 902만	1천 21만	158,805

출처 : 2008년 영국생협 연차 보고서

6)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등장한 대처 정권은 영국의 복지 분야를 크게 약화시켰다. 이에 대해 영국의 노동자협동조합은 출자한 노동자 외에 출자를 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지역 사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시 시작했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출발이자 중요한 모델이다. 지난 30년 동안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 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기구는 바로 지역사회의 협동조합개발기구(Co-operative Development Agencies, 이하 CDA)다.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탈리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장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역시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자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만든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이후 이탈리아 정부와 영국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착과 지원 그리고 제도화를 위해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마무리

이상에서 짧게나마 유럽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로 성공적인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지만, 독일의 도르트문트생협과 같이 자본 기업과 경쟁하다가 실패한 생협도 있다. 그리고 벨기에,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자본기업과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 날 협동조합들은 자본 기업과 경쟁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 주로 성공한 사례를 열거한 이유는 유럽의 실패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탓도 있지만, 이 시기에 성공 사례를 봄으로써 신자유주의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소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자본기업의 영향력도 크고 정부도 자본기업에 대해 호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서민들의 삶은 대단히 고단하다. 그런 가운데 협동조합, 생협이 노동자의 고용안정, 서민 물

가 안정 등을 위해 어떤 전망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하기 바란다.

참고 자료

1. Review 2009 by Co-operatives UK
2. The Co-operative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008/09
3. Coop Switzerland—Annual Report—2009
4. Coop Switzerland—Annual Report—2010
5. Financial Reporting MIGROS GROUP—2009
6. Fighting Climate Change through Consumer Co-operation Experiences from KF, 2009년 ICA 발표 PPT 자료(Sweden—Leif Linde, Director KF)
7. KF(The Swedish Cooperative Union) – Annual Report—2008
8. Mondragon Cooperatives Corporation – Annual Report—2009
9.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010』 농림수산물부
10. 레이드로우 / 김동희 역(2000),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11. 오사와 마리 외 / 정금수 외 역(2009), 『생활 속의 협동』 아이쿱생협연구소

참고 홈페이지

스위스생협 홈페이지: www.coop.ch

미그로생협(스위스) 홈페이지: <http://m09.migros.ch/en/downloads>

영국 생협 홈페이지 : www.co-operative.coop/corporate/corporatepublications

몬드라곤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mondragon-corporation.com

이탈리아 레가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legacoop.it>

인터뷰

레가협동조합 소속 아드리아티카생협 부회장 Rino Ruggeri, 2010년 7월 29일, 이탈리아생협 사무실

에밀리아로마냐주 의원 Maurizio Cevenini, 2010년 7월 28일, 시청

볼로냐대학 경제학과 교수 Stefano Zamani, 2010년 7월 27일, 볼로냐대학 자마니 교수 연구실 

지금 해외에서는

이주희 (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2012년 협동조합의 해’를 위한 협동조합인들의 준비

2012년을 위한 준비가 전세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CA는 2012년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업형태’로서 협동조합에 관한 이해와 지지에 기반을 둔 성장 시대의 출발로 삼을 수 있을지에 관해 UN사무국과 정기적으로 정보 및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 14개국(알제리, 브루나이, 키프로스, 독일, 일본, 모리셔스, 몽골, 파나마, 페루, 필리핀,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에서는 정부와 함께 공식적인 ‘국제협동조합의 해 전국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이미 약속하였다. ICA의 목적은 ICA회원들이 속한 92개국이 이러한 전국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ICA대표단은 이미 COPAC(Committee for the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Co-operatives, 협동조합 촉진 및 발전을 위한 위원회)와 같은 조정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국제협동조합의 해 관련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홈페이지(www.ica.coop/activities/iyc) 및 ‘2012년 카운트다운’이라는 e뉴스게시판을 개설하였다.

ICA회원들 또한 국제협동조합의 해 준비를 위해 바쁘게 지내고 있다. 일본은 전국위원회 공식 웹사이트(www.iyc2012japan.coop)를 개설하였으며 일본의 협동조합 섹터 50인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전국실행위원회를 설립했다. 미국 전국협동조합사업연합회(NCBA)는 2012년을 위해 보급, 연구조사, 정책의 3개 위원회를 설립했다.(www.ncba.coop/2012) 캐나다 협동조합운동은 기획위원회를 통해 행동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호주 협동조합운동은 지난 5월에 실행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외 핀란드,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정부와 함께 공식적인 전국위원회 설립에 힘쓰고 있다.

한국 협동조합 또한 협동조합협의회(iCOOP생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삼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를 통해 2011년 말 ‘2012년 협동조합의 해 출범식’을 개최하고 홍보 포스터 제작 및 협동조합 홍보대사를 임명해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2012년을 위한 캐나다 협동조합인들의 준비

캐나다 협동조합연합회(CCA)가 2012년 협동조합의 해 준비를 위하여 협동조합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협동조합의 해 메시지와 2012년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조합원이었으며, 10명 중 7명은 협동조합이 지역 경제의 자금을 지키며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은 협동조합이 사업운영을 계속하고 조합원의 자산을 유지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응답했다.(www.coopcanada.coop)

유럽 협동조합법 평가받다

유럽협동조합(SCE)법이 법적 복잡성과 규정에 관한 인식부족으로 제한적인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브뤼셀에서 열린 SCE 이행 검토 세미나에서 발표된 평가이다. EU의 19개 회원국에서 70인의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5월 8일 현재 존재하는 유럽 17개국의 협동조합관련법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강조된 점은 유럽협동조합법과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의 국내협동조합법률과의 조화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 각 나라 협동조합법의 현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각국 전문가들을 참가시켰으며,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협동조합기업 모델의 성공을 확인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요약본은 ICA 유럽지역위원회(www.coopseurope.coo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법제화의 상세한 사항을 포함한 1000페이지 이상의 전체 보고서는 EURISCE(www.eurisce.eu)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A의 2011~2012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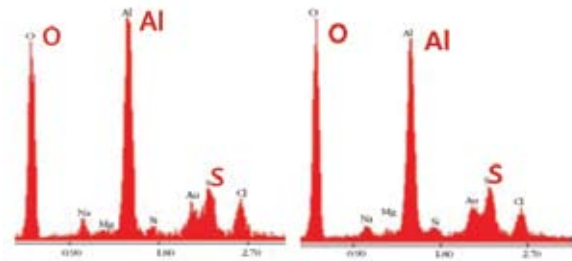
2011년	미정	ICA아프리카 협동조합각료회의, 나미비아
	5월 15일	협동조합 유럽 이사회, 모스크바(러시아)
	16-17일	협동조합유럽 총회, 모스크바(러시아)
	14-18일	ICA총회, 칸쿤(멕시코)
2012년	협동조합의 해 www.ica.coop/activities/iyc ICA-AP총회(일본) 제10회 ICA아프리카 각료회의(르완다)	

출처 : ICA 다이제스트 70호(2010년 10월) 

우리는 속고 있다, 속는 줄도 모르고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천안함언론검증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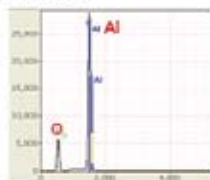
돌발퀴즈 하나 나갑니다. 제시된 2개의 그림을 보고 아래 보기에서 가장 유사한 그림을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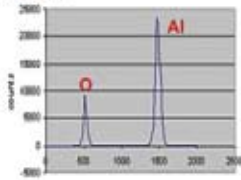
위 그림은 복잡하고 난해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이른바 ‘흡착물질’(천안함과 어뢰에서 발견된 물질)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물질인지 밝혀내야 한다면 웬만한 과학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참 쉽습니다. 분석을 통해 얻어낸 그래프와 후보 물질들의 표준 그래프만 확보된다면 그 다음은 그림 맞추기 퀴즈와 비슷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물질들의 표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슷한 그래프, 아니 그림을 찾아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원소 기호들이 까마득하시죠? 그림 맞추기 퀴즈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다만 빨간색 알파벳으로 표기한 산소(O), 알루미늄(Al), 황(S)이 중요한 성분들이고 나머지는 의미 없는 이물질들이라는 데는 논란이 없으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골라잡을 그림 4개를 보여드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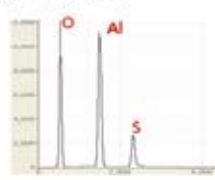
1. 산화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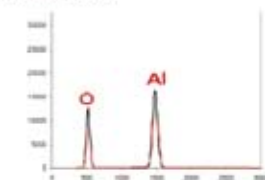
2. 보어마이트



3. 바스알루미나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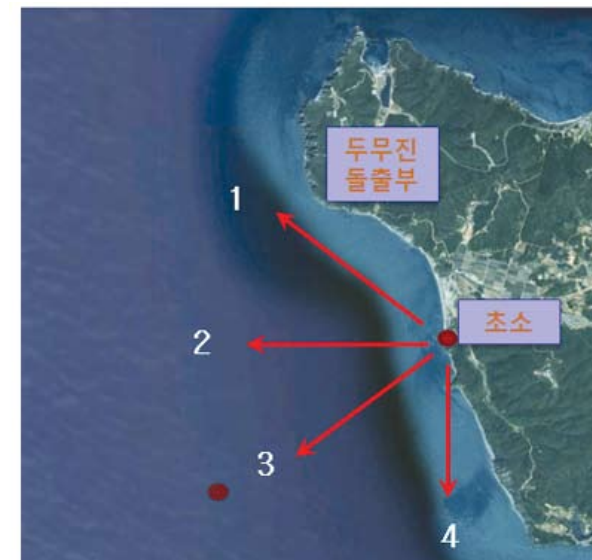
4. 수산화알루미늄



어떠십니까? 참 쉽죠? 이름이 생소하고 어렵지만 그림은 그림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3번 바스알루미나이트를 정답으로 꼽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답은 1번입니다. 물론 정부도 그림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흡착물질에 물이 들어있다는 등 이런저런

해명을 내놔지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고 과학자들도 도리질 칠 뿐 정부 말이 맞았다고 맞장구 쳐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번 퀴즈도 난이도가 첫 번째 문제와 비슷합니다. 좀 더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백령도 지도를 보고 푸는 퀴즈인데, 지도에 초소라고 적힌 곳에서 초병 2명이 함께 하얀색 섬광을 봤다고 합니다. 이들은 섬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령도의 지명인 두무진 돌출부라는 바위 절벽 쪽에서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두무진 돌출부는 지도에 적힌 곳에 있습니다. 초병들이 섬광을 바라본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는 다음 네 개 중 어느 것일까요?



이것도 참 쉽습니다.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답이 1번이라는 데 동의하시죠? 그럼 정부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3번입니다. 3번 옆에 있는 빨간 점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곳이고, 정부는 이곳에서 어뢰가 터져 생겨난 거대한 버블제트 물기둥을 초병들이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번과 3번 사이의 거리는 3km 가 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 합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정부의 엉뚱한 정답에 대해 언론은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신문도, 방송도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부가 엉뚱한 정답을 내놓고도 정정하지 않는 이유가 언론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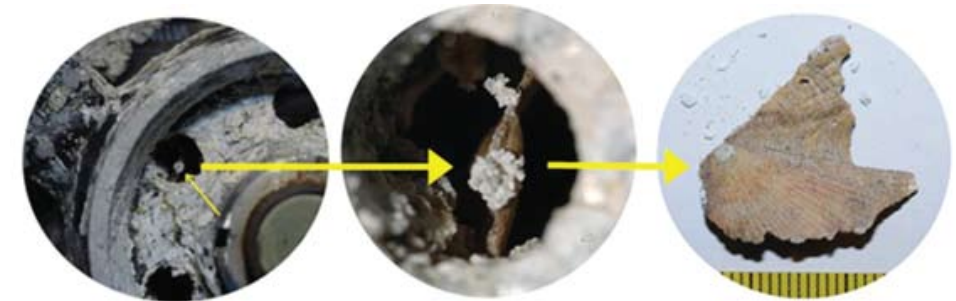
내친 김에 퀴즈 하나만 더 풀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천안함을 격침 시켰다는 어뢰의 프로펠러 구멍 속에서 조개가 발견되었다는 뉴스 들으셨죠? 꽃망울 같은 백색 물질이 껍질 끝에 위태로이 붙은 채로 조개는 1.8cm 작은 구멍 속에 숨어있었습니다. 하늘이 도와 쌍끌이 그물로 건져 올린 지 반년이 넘도록 정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어뢰를 살펴보다 이상한 녀석을 발견하고 정밀하게 사진 촬영을 하여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어뢰와 조개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조개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인지, 조개가 어뢰 프로펠러 속에 어떤 상태로 들어가 있었는지, 꽃망울 같은 백색 물질은 어떻게 그런 모양이 되었고 성분은 무엇인지 참 이상해 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 본 사람들은 어뢰가 실제로 천안함 사건 때 터진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줄 중요한 증거라며 증거 보존과 정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려 합니다. 퀴즈 풀기 전에 혹시 용케 정부의 눈을 피해 숨어있던 조개를 못 본 분이 계실까봐,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조개 발견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보신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놈입니다. 퀴즈는 이 조개를 대하는 태도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발견된 조개이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니 오해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퀴즈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드리겠습니다.

1. 비공개적으로 조개를 떼어낸 뒤 조개의 크기와 종류를 독자적으로 확인한다
2. 비공개로 백색 물질을 조개에서 분리한 뒤 독자적으로 성분을 분석한다
3. 공개적으로 조개와 백색 물질을 떼어낸 뒤 조개 종류와 성분 등을 독자 분석한다
4. 증거보전 조치를 취한 뒤 국회 등 제3자 참여 하에 분석을 실시하되, 분석 전 반드시 조개의 부착 상태와 백색 물질의 침전 상태 등을 파악한다

이번 퀴즈는 굳이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1,2번의 방식으로 조개를 떼어내고 백색 물질도 부숴했습니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하나 그것으로는 조개의 부착 상태와 백색 물질의 꽃망울 형태가 보여주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알 수 없어졌습니다. 조개가 발견되었다고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조개는 아래 사진 속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아래 사진은 정부 스스로 증거 훼손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전혀 두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최소한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불통의 시대, 2010년 오늘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책임의 큰 부분을 언론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을 전하지 않아도 언론 행세를 할 수 있는 현실, 중요한 것을 왜곡해도 언론 행세를 할 수 있는 현실, 사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념과 이해에 따라 보도의 내용을 가공해도 언론 행세를 할 수 있는 현실이 정부를 오만하게 만듭니다. 오만한 언론이 덜 오만한 정부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의 언론 현실은 언론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감시, 검증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언론은 왜곡과 오보의 책임을 지지 않은 구조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아래 뉴스를 기억 하십니까?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하자 다른 언론도 이를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글자가 작아 잘 보시기 어렵겠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아도 감정을 격하게 하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 2009년 12월 4일 '중앙일보' 1면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기사

이 기사가 보도된 뒤 철도노조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파업 대오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가 오보라고 판정했습니다.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 소식은 인터넷매체인 미디어스의 보도 외에는 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언론중재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아마 모르셨을 것이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속고 계신지 모릅니다. 언론이 고의로 속이든, 실수로 속이든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글을 맺으려 합니다. 땡전뉴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대부분 땡전뉴스의 실상이 어땠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5공 치하의 왜곡된 언론 보도를 땡전뉴스라고 통칭하니 그런가 싶겠거니 하실 겁니다. 아래 사진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 직후 한 방송사의 논평 장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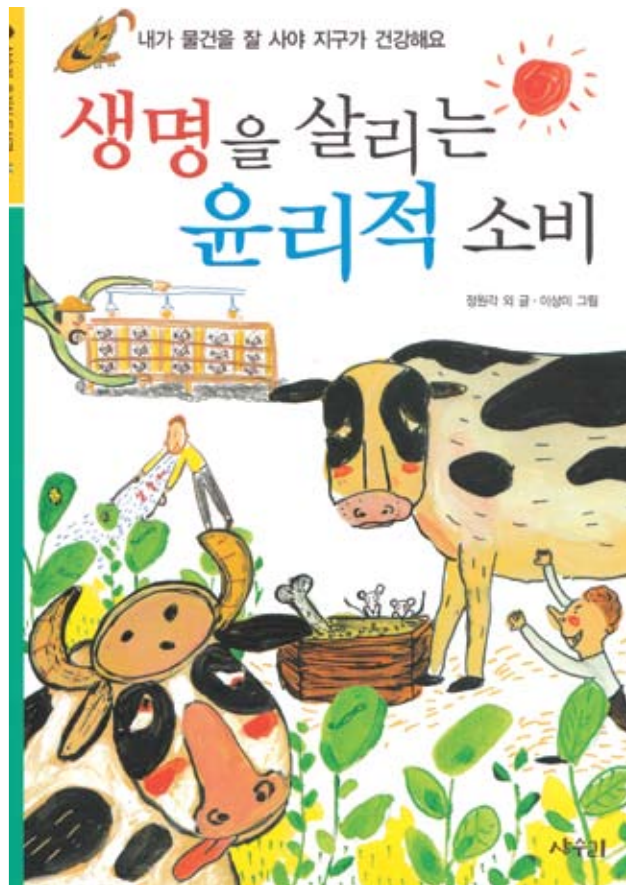
자막에 나온 말을 직접 했습니다. 설마? 정말입니다. 이런 보도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언론 상황을 살펴보면 낫 놓고 있다 당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공영방송의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여당 인사들이 등장하고, 추석 연휴 아침 프로그램에 대통령 내외가 나와 흘린 눈물이 뉴스로까지 확대 재생산 되었습니다. 이미 2007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에 똑 같은 말씀을 하며 우신 적이 있는데도 말이죠.

정부 비판을 못하는 언론이 좀 더 타락할 경우 정부 정책을 홍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타락하면 정책이 아닌 사람을 홍보하게 됩니다. 우리 언론은 정책 홍보에서 사람 홍보 단계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언론인들이 미덥지 않겠지만 징계도 당하고, 구속도 당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힘에 부칩니다. 신문 독자이고, 방송 시청자인 국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독자와 시청자에 기대 먹고 사는 것이 언론이니 국민은 주인으로서 실력 행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출발은 속고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윤리적 소비는 어릴때 부터

이선옥 (구로생협 문화위원, 르보작가)



요즘 아이들은 소비하는 자신을 노동하는 자신보다 먼저 동일시한다. 어릴 때부터 소비를 먼저 경험하기 때문이다. 대형 마트에 가면 갓난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부모와 함께 물건을 고르고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일터는 삶과 분리되어 있지만 소비는 삶 자체다. 하지만 소비자로서 정체성을 먼저 체험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소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관련 교육을 보면 대부분 경제교육이라는 이름

의 재테크, 주식투자, 가계부 쓰는 법, 부자 되는 법 같은 것들이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똑똑한 소비자가 되라고 가르치지만, 그 똑똑한 소비자란 건 알고 보면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경제동물일 뿐이다.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정원각 외, 상수리)가 반가운 이유는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내가 물건을 잘 사야 지구가 건강하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윤리적 소비’라는 단어조차 낯선 아이들에게 ‘윤리적 소비’의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왜 윤리적 소비가 필요한지, 내가 무심코 사고 쓰는 물건에 어떤 사연들이 담겨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이 책에서도 말하듯 윤리적 소비는 각 나라의 환경과 경제수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르다. 한국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 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아직 어른들조차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을 낯설어한다. 한국의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사람과 노동’, ‘식품 안전’, ‘농업과 환경’으로 정하고 있다. 내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소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내용들이다.

민주주의, 어린이 강제노동 금지, 인간적인 일자리 만들기, 일하는 사람들의 차별 금지, 공정무역을 통한 세계 평화기여, 화학 첨가물 엄격 관리,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 최소화, 항생제나 성장 촉진물 사용 안 하기, 화석에너지 줄이기, 친환경 농사짓기, 가난한 이들의 친환경 농산물 이용권리 등이 구체적인 윤리적 소비의 기준들이다.

단순히 구매만 제대로 하는 것을 넘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중노동 시켜 만든 축구공을 사지 않는 행위부터, 해당 기업에 항의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조직하고,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윤리적 소비인 것이다.

이 책은 윤리적 소비의 역사부터 개념,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윤리적 소비의 사례, 퀴즈로 푸는 윤리적 소비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윤리적 소비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광우병 소고기나, 항생제 사육과 같은 비윤리적 생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상을 폭로하는 것보다, 이를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의 필요성과 취해야 할 태도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관련 만화『과자가 무서워요』처럼, 위험성을 고발하는 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윤리적 소비’ 주체의 입문서로 기능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소 산만한 구성과 한국사회의 예가 부족한 점도 아쉽다. 다른 나라의 아동착취 문제와 함

께, 우리 일상의 생활재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제품과 그 너머 노동자들의 현실이 함께 다루어졌더라면 더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자칫 바다 건너 어떤 아이의 아픔을 공감하는 일과, 내 옆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대기업 반도체 노동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일을 별개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얼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쌀 한 톨에도 정치가 들어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정치 같은 것은 모른다고” 고 (故)김남주 시인의 말이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는 모든 것들에는 사실 제각각 사연이 있다. 인간에게만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나름의 생장스토리가 있다는 말이다. 만물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과정은 사실 그 모두가 정치다.

대형 마트에 가니 쌀 20kg이 35,000원까지 한다. 내 기억으로 20년 전에도 쌀값은 비슷했다. 15년 전에 내가 받았던 월급이 80만 원인데 지금도 그 직종은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한다. 하지만 10년 전에 내가 살았던 집은 3천 5백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 유치원생의 셈법으로 봐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임금은 제자리걸음인데 집값이 4배씩 뛰면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평생 집 사기 어려울 것이고, 모든 물건 값이 올랐는데 쌀값만 20년 째 그대로라면 농민들은 농사짓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스팔트 농사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백날 땅에 농사 지어봐야 늘어나는 건 빛과 한숨뿐이니, 차라리 길바닥에서 시위라도 하자는 말이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쌀에 농민들의 고통스런 삶과 그 삶을 만들어낸 정치공학이 있는 것을 안다면, 쌀을 단순히 음식으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쌀 한 톨의 정치공학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농민의 고통을 조금 더 예민하게 체감하는 ‘의식 있는 나’는, 20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값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생각하지만, 실질임금이 거의 제자리인 ‘모태 서민인 나’는 20년 째 그대로인 쌀값이 우선 반갑다. 그 쌀을 쇼핑몰에 담으면서 똑똑한 소비를 했다고 뿌듯해하는 것도 나고, 고랑처럼 패인 농민들의 주름살을 떠올리면 불편한 것도 나다. ‘정치적인 올바름’과 ‘현실적인 경제력’ 사이에서 하게 되는 고민, 그 사이에 ‘윤리적 소비’가 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윤리적 소비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윤리적 소비에 대해 배우고, 이를 자연스런 삶의 태도로 지닌 사람이라면 윤리적 소비는 훨씬 쉬울 것이다. 쌀 한 톨의 정치를 아는 사람은, 옷 한 벌의 정치도, 소고기 한 근의 정치도, 커피 한 잔의 정치

도 알 수 테고, 윤리적 소비의 가치에 대해 지금의 나와는 다른 셈법을 구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른이 다 된 후에야 이를 배우고 있는 나는 내 삶을 온통 압도하고 있는 비윤리적 상품들과 내 현실 때문에 이를 지키기가 무척 힘들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윤리적 소비란 결국 무얼 사느냐(buy)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live)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연드림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한 식품안전 운동이 자연스럽게 농업 지킴이로 이어졌으며, 농업 지킴은 곧 환경 지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비 기준을 바꾸는 활동과 사업, iCOOP생협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합니다.

조합원이 되는 방법

1. 매월 일정액의 조합비를 내고 생협 조합원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가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이 물품 유통마진이 거의 없이 이용하는 가격으로, 일반가에 비해 평균 20%가량 저렴합니다. (사)아이쿱(iCOOP)생협연대는 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회비(조합비)를 내는 대신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물류효율을 높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확대를 통해 생산자는 생산안정이 가능하게 한 우리 생협의 제도입니다.

전화가입 : 1577-0014

인터넷 가입 : <http://www.icoop.or.kr>로 접속하여 상단의 [조합원가입신청]을 누르시거나 <http://www.icoop.or.kr/coopmall>로 접속 후 이용안내 → [조합원 가입신청]을 누르세요.

2. 매월 조합비를 내지 않고 생협일반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협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물품을 보고 구입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생협물품에 익숙하지 못해 조합비를 내고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합비를 내지 않고 일반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협물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터넷 주문과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물류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를 내고 이용하는 조합원께서 일시적으로 조합비를 낼 수 없을 경우 일반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쿱(iCOOP)생협은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아이쿱(iCOOP)생협 가입 및 상담 전화 : 1577-0014

자연드림 전국 매장 안내 : 1577-6009